

경제위기는

촛불이 아닌

이명박과

국내외 대기업들

탓이다

그들이 책임지게 하라

촛불 짓밟기와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서

촛불은 계속돼야 한다

7월 12일(토)

“촛불을 지킵시다
국민이 승리합니다”

오후 7시 / 서울시청 앞 광장

7월 17일(목)

“헌법 제 1조,
국민주권실천의 날”

오후 7시 / 서울시청 앞 광장

청와대와의
‘물밑접촉’ 해프닝

3면



촛불과 이명박 OUT 투쟁

- 조계사 ‘촛불 수배자’들을 만나다
- NGO 정치와 촛불
- 촛불과 노동조합 운동

2~3, 6~7면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무대책

4면

고유가의 고통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5면



영국 과학자에게서 듣는
광우병, 과학, 자본주의

8~9면

존 몰리뉴 칼럼

- 가부장제 이론의 문제점
- 맑스주의 여성 해방론

10~11면

<PD수첩>, 조중동 반대 네티즌
탄압 중단하라

6, 16면

독자들의 목소리

12~13면

<맞불>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맞불> 온라인 기사

탈레반이 한국에서
테러를 기도했다고?
정부가 마약 원료 밀반출 사건을 테러
기도로 터무니없이 부풀린 사실을 고발
한다.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국민을 머슴처럼 섬기겠습니다(당황하더니)
… 주, 주인처럼 섬기겠습니다.”
- 전당대회에서 한나라당 의원 김성조

“지나놓고 나면 결국 후퇴하지 않고 전진이다 소 늦어질 뿐이지만 결국 전진할 것”
- 미친 정책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표 만나러 왔다. 끼지 마라.”
- 민주노동당을 방문한 홍준표가 이정희 의원에게 저지른 무례

“KBS 사장 임명권은 물론 해임권도 대통령에게 있다.”
- 문화관광부 2차관 신재민의 언론 통제 의지

“일본도 및 칼이나 돌맹이나 쇠덩이,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서울 한복판의 촛불 시위대를 살인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분들은 나에게 쪽지를 보내 달라.”
- 뉴라이트전국연합 웹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방치된 글

“[이명박은] 전 재산 사회 환원 약속을 당장 실천하라. … 재벌 무대 전면에 나서지 말고 … [국민들은] 대통령이 TV에 나오면 채널 돌린다”
-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창중의 충고

“쇠고기 촛불이 꺼지더라도 공기업 개혁을 시작하면 촛불이 또 등장할 것이고 정부의 역점적인 과제들과 시책들에 대한 반대 촛불은 … 5년 내내 계속될지도 모른다.”
- 한나라당 홍준표의 격정

“과거 정치적 위기의 순간에 국민투표가 하나의 돌파구가 됐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
- 이명박에게 기회일 수 있다며 국민투표를 권하는 민주당 천정배

“‘촛불 끄자’고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자그맣한 번도 촛불을 안 든 사람들”
-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50만 촛불에도 눈감은 이명박

전지운

7월 5일 다시 펼쳐진 50만 촛불의 바다는 이명박의 온갖 꼼수와 탄압에도 국민 대다수의 염원과 진실은 여전히 진정한 개혁과 변화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추가협상이라는 사기극을 거부하고, 온갖 미친 정책들과 미친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전문 반미 시위꾼들의 깃발 시위’라는 조중동의 비난은 산산이 무너졌다. 반면 청계광장의 촛불 반대 집회에는 고작 2백 명이 모였다.

꼬리도 안 자른 개각

그러나 이명박에게는 50만 촛불의 함성도 쇠귀에 경 읽기였다. 이명박은 바로 다음 날부터 촛불 짓밟기를 다시 시작했다. “청와대 뒷산에서” 또 무슨 흥계를 꾸렸는지 알 만하다.

경찰은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했고, 심지어 기독교대책회의의 ‘촛불 교회’ 천막까지 철거하며 “종교행사 명목으로 열린 촛불집회의 경우도 … 전체적 상황을 종합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원천봉쇄’하고 민주주의를 ‘철거’하려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을 가로막고, 검찰 수사로 MBC <PD수첩>을 압박하고 있었다. 언론과 인터넷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눈·귀·입을 막으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촛불이 계속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협박질을 계속하고 있다. 경제 위기가 걱정되면 미친 정부



이명박은 이 촛불의 바다를 ‘청와대 뒷산에서’ 보면서 흥계를 꾸었다

와 미친 정책과 광우병 위험도 감수하라는 협박이다.

이명박이 약속한 ‘내각 교체’도 결국 꼬리 자르기는커녕 꼬리의 비늘 몇 개를 떼어 내는 것에 그쳤다. 무엇보다 서민 말살 경제 정책의 우두머리인 강만수, 폭력과 공안 탄압의 지휘자인 어청수 등이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이들이 “제대로 일을 해볼 기회도 없었다”는 게 이명박의 말이다. ‘재벌천국과 서민지옥’, ‘역사 거꾸로 돌리기’를 위해 아직 할 일이 많다는 얘기다. 이번 ‘개각’은 강부자 내각을 유지하며 온갖 반서민적 개악을 계속하겠다는 선언이다.

재벌·강부자들이 기침 소리만 내도 알아서 기어 온 이명박 정부에게 50만 촛불의 함성과 촛불을 지지하는 70퍼센트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경제 위기 속에 노동자·서민에게 자기들의 몫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재벌·강부자의 ‘머슴’이기 때문이다.

‘절반의 승리’를 넘어서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명박은 촛불을 빨리 꺼버리고 ‘재벌천국 서민지옥’ 프로젝트를 재가동하려고 조바심내고 있다.

촛불 운동 내에서도 ‘제도권 수렴’을 지지해 온 온건파들은 촛불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듯하다. <조선일보>는 “이제 우리 진보 진영 불륜은 상당히 커졌다. 이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법과 제도를 통해 담아낼 때 … 민주주의가 안정된다”며 이런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촛불을 짓밟거나 적당한 수준에서 통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쉽지 않을 것이다. 촛불이 단지 쇠고기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근저에 경제적 생활고, 우파적 정치 등에 대한 심원한 불만에서 비롯했기 때문이다.

촛불의 요구들과 이명박 사 이에 타협의 여지도 거의 없다. 박원석 대책회의의 상황실장의 지적처럼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마치 이명박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말처럼 되어 버린 것이다. 더구나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촛불은 다시 거세게 타올라 수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생겨날 새로운 촛불집회”가 “더 무

섭다”고 했다.

촛불은 “쇠고기에서 촉발됐지만 더 광범위한 경제적 비판으로 변했”(〈월스트리트저널〉)고 “‘불도저’ 대통령을 초라하게 만들었다.”(〈파이낸셜타임스〉)

이처럼 촛불은 절반의 승리를 거뒀지만, 아직 진정한 승리를 한 것은 아니다. 손석춘 씨의 지적처럼 “지금은 승리를 선언할 때가 아니[며] …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논리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촛불의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며 노동자 파업 등으로 그 불씨를 퍼뜨려 나가야 한다.

조계사 ‘촛불 수배자’ 농성 현장 취재

“끝까지 촛불과 함께하겠습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박원석·한용진 공동상황실장, 김광일 행진팀장, 김동규 조직팀장, 백성균 미친소닷컴 대표, 백은중 2MB탄핵투쟁연대(안티 이명박 카페) 부대표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활동가 6명은 지난 7월 6일부터 조계사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 셋째 날인 지난 7월 7일, 조계사를 방문해 ‘촛불 수배자들’을 만났다.

조계사로 가는 길목에는 전경버스가 죽 늘어선 있었다. 수배자들이 지내는 천막에는 모기가 계속 모여들었고 30도까지 치솟는 찜통 더위를 선풍기 한 대로 식혀야 했다.

그래도 수배자들은 뽀뽀이 흠어져 있을 때보다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도피 생활을 할 때는 인터넷 생중계로만 집회를 지켜보는 게 가장 답답하고 힘들었다고 한다. 거리 행진을 이끌었

던 김광일 행진팀장은 구호를 외치는 환청이 귓전에 맴돌 정도였다. 그러다 7월 5일 집회에는 수배자들도 참가해 큰 힘을 얻었다고 했다.

환대

농성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백성균 미친소닷컴 대표는 “죄지는 건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싸울 수 있어야 되



조계사 농성 현장 - 응원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지 않겠나” 하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원석 상황실장도 “흠어져서 숨어 있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공안 탄압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3면으로 이어짐

이렇게 생각한다 - 〈맞불〉 논설

‘물밑접촉’, 되풀이하지 말아야

아이러니하게도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촛불시위가 정점에 오른 직후 난점을 드러내곤 했다. 6월 10일 1백만 시위 직후에 그랬고, 공안탄압을 뚫고 50만 규모의 촛불이 모인 7월 5일 직후인 지금도 그렇다.

6월 10일 직후에는, “정권 퇴진 운동 불사” 입장을 밝혔던 국민대책회의가 경고 시한인 6월 20일 뒤에도 정권 퇴진 운동을 결정하지 못한 게 문제였다. 국민대책회의가 경고대로 이행할 태세가 돼 있지 않음을 확인한 이명박 정부는 기만적 반성문 제출→추가협상 발표→고시 강행→공안탄압으로 숨가쁘게 몰아쳤다.

7월 5일을 전후해서는, 촛불 운동의 기조 변화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촛불집회 횟수를 주 1회로 줄이고 대신 불매운동이나 국민투표 요구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온건 시민단체들은 애초 7월 5일 집회가 이런 기조 변화의 선포장이 되기를 바랐던 듯하다.

그러나 촛불 운동이 무슨 스포츠 스타도 아닌데 왜 절정에 달했을 때 ‘은퇴’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말인가. 공안탄압 속에서도 7월 5일 촛불대행진에 수십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견됐었는데 말이다.

국민대책회의는 상당한 내부 이견에 부딪혀, 7월 5일 집회를 앞두고 이런 기조 전환을 결정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7월 5일 촛불대행진을 향후 촛불 확대의 발판으로 삼기보다 그동안의 성과를 일단락짓는 장으로 모색하는 기류가 일각에 암묵적으로 존재했다. ‘국민승리선언’이라는 집회 명칭에서 힌트 드러나듯이 말이다.

청와대의 책임있는 사람을 통한 국민요구사항 전달이 성사됐다면 그나마 그동안의 성과를 일단락짓는 계기로 평가됐을 수 있다. 이런 구상 속에서 몇몇 주요 시민사회단체 책임자들이 청와대의 책임 있는 사람을 통해 국민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 ‘물밑접촉’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청와대와의 ‘물밑접촉’을 통한 사전협의는 청와대로부터는 뒤통수를 맞



7월 6일 ‘촛불 교회’마저 철거한 경찰 - 온건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물밑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명박은 이런 폭력 탄압과 촛불 원천 봉쇄로 나왔다

고 촛불 운동 내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당혹스런 결과만을 낳았다. 말할 것도 없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청와대가 ‘촛불 끄기를 조건으로 한 대화’ 운운하며 비열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한 데 있다.

공개적

그럼에도 국민의 요구를 전하는 대책회의의 선의를 이처럼 야비하고 간교한 청와대가 악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어야 했다. 그래서 촛불 지지자에게는, 대책회의에서 합의된 공식 절차에 따라 공개적 방식으로 요구 사항 전달이 이뤄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크다. 국민대책회의의 운영위원들은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야 비로소 청와대와의 ‘물밑접촉’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공안탄압을 휘몰아치고 촛불 운동의 방향을 둘러싸고 민감한 내부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촛불 운동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청와대와의 협의가 물밑으로 진행된 것은 부적

절했다.

국민대책회의의 소속 주요 시민·사회단체 간부 3명과 만나 사전협의의 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임삼진은 얼마 전까지 유명 시민단체 지도자였고 전태일 열사의 매제다. 그가 시민사회 진영 인사들과 두루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점은 익히 예상할 수 있다. 바로 이 점, 시민사회 진영 인사들의 생리를 꿰뚫고 회유할 능력이 이명박이 그를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발탁한 이유가 아니겠는가.(6면에 실린 관련기사 ‘촛불 항쟁과 NGO’를 참조하시오.)

국민대책회의는 ‘국민요구사항’을 집회에서 발표하고 ‘이 요구를 전달하려 하니 청와대의 책임 있는 인사가 나와서 접수하라’고 공개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 이 요구를 무시한다면 청와대는 거리에 나와 있는 수십만 대중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만약 청와대의 책임 있는 인사가 나온다면 그 만남에서 오가는 대화는 방송을 통해 전부 공개돼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대표는 수십만 대중의 든든한 지지를 등에 업고 대화에 임할 것이고, 개인적 친분이나 압력이 작용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진실 공방의 여지 자체가 없을 것이다. 공개적 방식이 필요한 까닭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청와대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 대책회의 내에서 합의된 공식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또, 청와대가 요구 전달조차 촛불집회 중단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므로 대통령 면담 요구가 더는 의미 없어졌음을 공개 표명해야 한다.

지금 촛불 운동은 성과를 거두며 ‘화려하게 은퇴’하는 모양새를 고민할 때가 아니다. 몇몇 성과가 있지만 두 달 넘도록 마음고생, 몸고생 한 촛불 지지자들은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자격이 있거니와, 기왕의 성과도 이명박의 반격으로 그나마 매우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혹심한 탄압 속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한 촛불을 이어가도록 노력하면서 다시 촛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심각한 경제 위기와 기만적 개각 같은 이명박의 실수 덕분에 이런 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2면에서 이어짐

고 했다.

백은종 2MB탄핵투쟁연대 부대표는 경찰 조사에 응하려다 체포영장을 보고 황당해서 마음을 바꿨다고 했다. “5월 2일 문화계 외에 소환장 받은 이후에 일어난 일까지 죄목이 한 다섯 가지 되는데 완전 ‘반정부 공안사범’이더라고요. ... 경찰은 묵비권 행사하거나 변호사 선임해서 해명하면 된다 했지만 이명박이나 어청수가 해명으로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붙잡혀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응할 수 없는 거죠.”

미처 조계사 측의 허락을 얻는 절차 없이 들어왔지만 수배자들은 환대를 받고 있었다.

“조계사 측에서 우릴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수배자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식사나 샤워시설, 수배자들을 위한 편의 공간 같은 걸 제공해 주고 있고, 스님들이 계속 오셔서 격려해 주고 신도들도 와서 격려해 주시고, 어제 밤엔 주변에 경찰력이 엄청 증강됐는데 그 소식이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수배자들 지키겠다고 시민들이 모였거든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김광일 행진팀장)

기자가 천막을 방문한 7일 저녁에도 교복을 입은 청소년 예닐곱 명이 수배자들을 응원하러 천막에 와 있었다.

그러나 경찰청장 어청수는 “종교시설이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하며 수배자들을 위협했다.

백성균 대표는 “이 성스러운 공간에 더러운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한용진 상황실장도 “[종교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운운하는 것은 ... 민주주의 시계를 완벽히 거꾸로 돌리는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영광

김동규 조직팀장의 말처럼 “촛불은 이명박 정부나 검찰·경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프로 데모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촛불의 프로는 우리 국민들”이다.

수배자들은 조계사 농성장에서도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계속 밝히겠다고 했다.

“이 운동을 출발하게 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왔던 것은 바로 시민들의 역동성이었습니다. 우리 수배자들의 운명, 좀더 넓게 보면 이명박 정부의 경찰을 이용한 탄압 자체가 운동을 어떻게 강하고 크게 키우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조계사에 갇혀 있지만 이 운동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김광일 행진팀장)

“우리 국민들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끝까지 지지해 달고 두려워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촛불을 들면 이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이란 건 없거든요.”(박원석 상황실장)

인터뷰 · 정리 승주, 안형우

경제 위기의 터널에서 헤매는 미국 경제

강동훈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했던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7백50억 달러(약 77조 원)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혀져 전 세계 금융 시장이 다시 요동친 것이다.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시작한 이번 금융 위기는 미국의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부실 채권이 늘어나고 있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 20대 도시의 4월 집값은 1년 전보다 15.3퍼센트 떨어졌고, “2009년 말까지 추가로 15~20퍼센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을 보증했던 미국의 주요 채권보증회사 ‘암박’과 ‘MBIA’의 신용등급이 지난 6월 말에 강등되면서, 이 업체들이 보증하는 1조 2천억 달러(약 1천2백 40조 원)에 이르는 채권들도 모두 신용이 강등돼 연쇄적으로 금융권에 부담을 주고 있다.

부실 채권의 규모가 워낙 크고 이 채권들이 다양한 파생상품으로 변형돼 넓게 퍼져 있어 미국의 주요 금융회사들은 추가로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파산할 위험에 처해 있다.

파산

금융 위기는 미국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달러 약세 그리고 이에 따른 석유·식량 가격 폭등 등으로 미국 물가가 급등하면서 세계경제를 지탱해 온 미국 소비가 급감했다.

특히 폭등하는 기름값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20퍼센트 정도 줄어 자동차 회사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 때문에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GM이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기업들은 경제 위기에 노동자 해고로 대응하고 있다. 금융 위기 이후 금융 회사에서만 6만 5천여 명이 해고됐고, 스타벅스가 1만여 명, GM도 수천 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에서 6월에만 6만 2천 개 일자리가 사라져 총 실업자가 8백50만 명(5.5퍼센트)으로 늘어났다. 전일근무에서 파트타임으로 옮겨간 사람이나 구직을 포기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실업자 수는 갑절 가까이(9.7퍼센트) 될 것이다.

이런 실업률 상승은 소비를 줄여 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모기지·신용카드·자동차 대출 등의 연체를 늘려 금융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수출 증대로 지탱하던 한국 경제도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 2008년 일사(1/4)분기에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5퍼센트 증가했지만 석유·식량 가격 폭등 때문에 수입액도 28.2퍼센트나 증가해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됐다.

미국의 경기 후퇴 심화에서 알 수 있듯이, 하반기에는 수출이 줄어든 것이 확실해,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되고 경제성장률도 떨어질 것이다. 경상수지 적자는 환율 상승(원화 약세)의 주요 요인 중 하나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성장 위주 정책을 펴면서 수출을 늘리려고 환율 상승을 조장해 왔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6월까지 중국·일본·대만 등의 통화가치는 미국 달러화 대비 6.5~7퍼센트 절상됐는데, 원화는 되레 10.5퍼센트 절하(환율 상승)됐다. 결국 5월 수입물가가 전년동기 대비 44.6퍼센트나 올라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5퍼센트를 기록했다. 물가 인상으로 소

비가 위축되고 일자리 증가폭도 크게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물가 인상을 잡기 위해 최근 외환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촛불시위에서 나타났듯이 물가 폭등 때문에 노동자·서민의 불만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물가 폭등으로 소비와 기업 매출이 감소하면 고용에 악영향을 주고 금융권에 직격탄이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환율 개입

물가 폭등으로 채권값이 급락(금리는 급등)하면서 이자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은행채금리 변동과 연결돼 있어서 최고금리가 9퍼센트를 넘어섰고 가계 대출 금리도 7퍼센트가 넘었다.

금리가 조금만 더 오른다면 2백20조 원

지배자들은 주택 가격 거품을 키워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를 만들었지만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를 생각은 없다

무능한 ‘경제’ 대통령 이명박

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6백40조 원에 이르는 가계 대출의 연체율 증가와 집값 폭락으로 이어져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엄청난 환경 재앙을 낳을 대운하 사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도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낳을 파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이 두려워 경제 성장 정책을 쓰기도 힘들고,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올리는 것도 금융권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경제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환율 개입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보는 사실 이명박 정부만의 특징도 아니다.

예를 들어, <파이낸셜타임스>의 수석 경제평론가 마틴 울프는 올해 3월 금융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의 개입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다. 정부가 경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장을 유지하는 은행 구제 정책보다 물가를 잡는 긴축적 통화 정책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물가 인상률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일자리와 복지, 생활수준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며 싸워 경제 위기의 책임을 지배자들이 지게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대중이 민주적으로 결정한 우선순위를 통해 거대 기업들의 생산을 결정하고 통제해야만 대중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경제 위기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온건파와 달리 정부 권력과 맞서기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저들의 위기, 저들의 책임

지배자들의 오락가락 행보는 사실 이들이 경제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지배자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긴축 정책과 경기 부양을 꺼내들 뿐이다.

이런 우왕좌왕은 지배자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

자·서민이 치러야 한다는 데는 지배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한편으로는 물가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의 소득을 감축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임금 억제와 대량 해고로 고통을 전가하면서 기업의 이윤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경제안정 종합대책’도 의료산업 영리법인화, 법인세 대폭 인하, 공기업 민영화, 한미FTA 비준 등을 추진해 결국 위기의 대가를

서민 허리띠 졸라매기와 고통 전가

김용욱

지난 주말 유가가 배럴당 1백45달러를 돌파하면서 곧 배럴당 1백 달러 후반대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2년 안에 유가 2백 달러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고, 석유 수출국기구(OPEC) 의장은 올 여름에 유가가 배럴당 1백7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3백 달러 이상으로 치솟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질 것처럼 보이자 그동안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이명박 정부가 7월 6일과 8일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유가가 1백50달러를 넘으면 관공서 승용차 홀짝제 전국 실시, 대중 목욕탕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격주 휴무제, 골프장·놀이시설·유흥음식점의 야간 영업시간 단축, TV 방영 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도입될 것이다.

그러나 가정과 상업 활동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일부(약 21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번 대책은 석유에 대한 과잉 의존 —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 과 에너지 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대책에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산업 부문의 에너지 절약 조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한국의 부문별 에너지 사용 비율은 산업 56퍼센트, 수송 21퍼센트로 산업 활동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말이다.

전체 에너지 사용의 21퍼센트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에 대한 정부 대책은 승용차 5부제 도입과 공공교통 이용 권장 이 전부다.

그러나 과연 현재 대중교통 체계가 더 늘어날 승객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미 통근 시간 대중교통은 쾌적함과는 거리가 멀다. 대도시 지하철은 통근 시간에 ‘지옥철’로 변한 지 오래다. 인원 삭감으로 무인 교통카드 충전이 잘 안 되면 어디 물어볼 곳도 없다. 만원 버스에 더 많은 사람들이 탈 것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온다.

부자들은 ‘기름먹는 하마’인 대형 승용차, 헬기 심지어 전용 제트기— 최근 삼성 그룹은 1회 주유량이 마티즈 7백대와 맞먹는 보잉 737 전용 제트기를 구입했다 — 를 타고 다니는데 서민들만 짐짝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려면 대중교통이 더 쾌적하고 저렴할 필요가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기업들이 무료 통근 버스를 늘리든가, 대중교통 이용료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 동시에, 전철과 버스편을 늘리고, 버스도 연비가 더 좋고 쾌적한 것으로 바뀌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도시 구역을 재정비해 노동자들의 평균 통근 거리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조치가 도입되면 수송에서 획기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 개발을 발미로 핵 발전 확대를 밀어붙일 수도 있

대중교통을 확충하지 않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은 지옥철을 초(超)지옥철로 만들 것이다

정부 대책은 냉방 온도 상향 조정 등 산업 노동자들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에 산업체 소유·경영자들에게는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시 투자세액 공제 혜택 1년 연장 및 세액공제액 15퍼센트 확대(현행 10퍼센트)” 등을 통한 시

장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러나 그런 ‘인센티브’들은 성과를 거둔 적이 없었다. <에너지통계연보>를 보면 1990년부터 전체 제조업 에너지 사용은 1997년 IMF 공황 직후 잠시 감소한 것을 빼면 해마다 평균 4.5퍼센트씩 증가

진정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가

다. 실제로 6월 24일 총리 한승수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핵 발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않은 방식이다. 풍력, 태양력 등 역대 정부들이 무시해 온 대안들이 도입돼야 한다.

또, 재벌이 석유 같은 화석 에너지를 낭비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조직해 온 것을 눈감아 준 정부의 관행에 제동이 걸려야 한다. 그런 생산방식은 많은 환경 파괴 물질을 방출하기도 한다. 규제 조치가 실제로 필요하다.

지금까지 말한 변화들이 가능하려면

교통수단의 변화를 위해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하고, 계획적으로 대안에너지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 재벌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

민주적 통제

이를 위해서는 각종 투기 활동에 낭비되는 땅·주식 부자의 돈, 석유 기업과 기타 재벌들의 이윤 중 일부를 환수해서 사회 전체의 공공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석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축시켜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재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했고, 그 결과 오늘날(2007년 기준) 한국은 유럽연합에 비교해 동일한 가치를 생산할 때 두 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BP 통계리뷰).

이명박 정부는 어떤 상황이 와도 대기업의 이윤을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음을 이로써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서민들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 석유 사용량을 줄이더라도 석유 기업들은 남은 분량을 해외로 수출해 추가 이윤을 얻을 것이다.

한 석유 업계 관계자는 “국내 석유 제품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경영 환경에 플러스 요인 … 내수 유통분을 수출로 돌리면 정유업체로서는 이윤이 더 많이 남는 게 사실”이라고 환영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에는 노동자·서민의 고통을 덜어 준다는 관점이 전혀 없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유류세 대폭 인하 등 서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가 7월 6일 발표한 대책에는 유가가 배럴당 1백70달러를 넘었을 때 “유류세 추가 인하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얼마나 인하할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7월 8일 대책의 초기 도입을 발표하면서도 유류세 인하는 “논의를 해보겠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대책에는 “엘리베이터 사용 제한(4층 이하 금지, 5층 이상 격중 운행)”이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권이 크게 제약받을 것이다. 또, 겨울철 사병들의 온수 목욕 횟수를 주 1회로 줄인다는 황당한 조치도 있다.

있는 조치들을 도입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해, 이윤과 시장 논리가 지배하던 곳에 민주적 통제와 계획을 도입해야 한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기업들의 에너지 사용을 엄격히 통제했다. 파괴와 살육을 위해 할 수 있었는데 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서는 못하는가.

오늘날에도 몇몇 정부는 이런 조치들 중 일부를 도입했다. 에너지 부문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고 빈민층을 돕는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가 대표적이다. 영국 노동조합들은 영국 석유 기업들의 초과 이윤을 회수해 노동자를 위해 사용하라고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앞서 언급한 근본적 조치들 중 어떤 것도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이명박에 반대해 싸우는 것은 서민들이 고유가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고통받고 석유 메이저들은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 미군의 점령과 침략으로 이라크에서 1백만 명이상이 죽었다. 부시 정부는 현재 이란에 군사 공격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하면 고유가 문제는 초(超)고유가 문제로 악화할 것이다. 침략군 옆에 곱사리껴서 피묻은 석유를 얻어 자기 배만 불리려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

석유 쟁탈전 참가에서 떡고물 얻기

이명박 정부는 고유가를 한국 자본의 해외 석유 쟁탈전 참가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하려 한다. 실제로 한승수 총리는 “국제유가 변동에 대한 우리 경제의 통제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해외 에너지·자원 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명

박 정부는 쿠르드족 자치 지역 석유 광구 개발권을 따낸 ‘성과’를 자랑하기도 했다.

이것이 유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라크를 점령한 미국에서 고유가로 인한 고통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서민들은 고유가로

“계속 촛불을 들며 신념을 지킬 거예요”

7월 7일 ‘촛불 수배자들’을 만나러 조계사에 갔을 때, 수배자들을 응원하러 온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들 중에서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체벌을 당한 사실이 알려진 경기상고 2학년 **정호동 학생**을 인터뷰 했다.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식으로 연결하셨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 씀드렸을 뿐인데 체벌을 하셨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울면서 학교를 뛰쳐나왔어요. 그 선생님은 학생들을 바보 취급하면서, 다른 반 아이들에게 제가 촛불집회 참가하는 걸 두고 ‘골빈 놈’ 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촛불집회에는 10번 정도 참가했고 자유발언도 한 번 했어요. 중학교 때 TV 다큐멘터리를 보고 미국 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거든요. 청소년이라고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자료도 열심히 찾아봤어요. 대운하나 민영화 같은 문제도 크다고 봐요.

“솔직히 [집회 참가에 대한 비난 때문에] 쫓아서 한동안 촛불집회 안 나갔는데 그 일[체벌] 있고 나서는 다시 나가게 됐어요. 제 신념대로 촛불 집회에 계속 나갈 거고 소신을 지킬 거예요. 근데 저 말고도 용기 있는 청소년들이 많고 전 그 중 한 사람일 뿐이에요.”

인터뷰 · 정리 승주, 안형우

청소년 기고

한 여고생의 자살 소식을 접하고서

월요일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안양의 고3 여학생이 5일 자정쯤에 집 근처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이다. 유서의 내용으로 봐 이 학생은 7·5 촛불대행진에 참가했고 이명박 정부와 담임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많아 보였다.

지인의 말을 들어보면 이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란 것에 대해 담임이 평소 모욕을 줬다고 한다. 유서내용을 봐도 담임을 원망하는 내용과 “현실도피”, “사회부적응”이란 말이 있다. 그동안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고도 한다.

무엇이 이 여학생을 자살로 몰아간 것일까? 입시지옥을 견디지 못했을까, 빈곤을 견디지 못했을까, 그것도 아니면 담임 때문이었을까? 같은 고3, 아니 같은 한국의 학생으로서 모든 것이 문제라 말하고 싶다. 무한경쟁의 입시지옥은 이명박 정부의 미친 교육정책으로 극으로 치닫고 있고 우여곡절 끝에 20대가 되더라도 ‘88만 원’이라는 비정규직의 꼬리표만이 우리를 기다린다. 더욱이 우리는 하소연할 곳이 없다. 학교 선생님들이 나서서 우리를 경쟁에 몰아넣고 있는 데다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대학에 보낼 상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생명이 죽었다. 꽃피우지도 못한 채로. 이런 사회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핀란드나 프랑스 같은 교육제도를 도입한다면 간단히 해결된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와 보수세력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 우리의 ‘마지막 잎새’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향수(고3 학생)

촛불 항쟁과 NGO

장호중

참여연대 등 한국의 사회운동적 NGO들은 이번 촛불 운동에서 대단히 큰 구실을 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상황실장을 맡았고, 이 때문에 경찰은 박원석 씨를 수배하고 참여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국의 사회운동적 NGO들이 이러저러한 사회운동에 참여해 중요한 구실을 한 것은 결코 낮은 일이 아니다.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과 2004년 탄핵 반대 운동 때도 그랬다. 그래서 사회운동 NGO의 지도자들은 사회 개혁을 바라는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운동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이처럼 영향력 있는 NGO 지도자들이 종종 운동의 특정 국면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운동에 온건화 압력을 넣어 운동에 해를 입히기도 한다. 대책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주요 NGO 지도자들은 촛불 운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정권 퇴진 운동으로 발전하려는 것을 막았고 최근에는 거리시위가 아니라 불매 운동 등으로 변화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개인적 실수나 일탈도 있겠지만, 운동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NGO 지도자들이 어느 날 그 운동의 발목을 잡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NGO 정치가 안고 있는 모순 때문이다.

NGO 정치는 공통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단일 쟁점 집중을 통한 개혁주의이다.

한국에서 NGO들은 1987년 항쟁으로 정치적·시민적 공간이 열리고 1989년 옛 동구권 스탈린주의 체제의 붕괴로 많은 활동가들이 근본적 변혁에 회의를 가지면서 대거 등장했다. 그래서 NGO들은 개혁주의 정치에 근거해 단일 쟁점에 집중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개혁주의는 체제 내에서 자본주의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탈리아 맑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개혁주의자들이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지만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사용해서 싸운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6월 26일 정부의 고시 강행에 항의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시민사회연석회의가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NGO들도 자본주의의 불의에 맞서 싸우지만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사용해서 싸운다.

NGO가 수용하는 친자본주의 이데올로기는 두 가지 주요 이론에 근거하는데 그것은 신사회운동론과 시민사회론이다. 신사회운동은 계급 운동이 아니라 정체성 정치를 강조한다. 즉, 여성, 환경, 동성애자 문제 등에 각각 맞서 싸우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사회운동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실제로는 계급 쟁점이다. 이 문제들은 모두 연결돼 있으며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다.

개혁주의

시민사회론은 자본주의 국가에 도전하지 않는 개혁주의 이론인데, 이 이론은 압력단체들(보통 중간계급으로 구성됨)이 충분히 강력하다면 국가가 중립적으로 처신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계급 권력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도 현재의 국가를 개혁해서 평등한 민주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개혁주의 이론들은 자연스럽게 단일 쟁점 집중으로 이어진다. 단일 쟁점 집중은 촛불집회 운동처럼 많은 쟁점들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운동에 질적인 발전이 일어나려 할 때, 다시 말해 낱알의 쟁점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고 정권 자체에 맞서 싸워야 할 때 운동의 도약을 거부하게 만든다.

그래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소속

주요 NGO들이 쇠고기 문제를 넘어 의제를 확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결론인 이명박 퇴진 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꺼렸던 것이다.

한편, NGO 지도자들은 대부분 그들에 대한 통념과 달리 운동 내부의 민주주의를 무시한다. NGO 지도자들은 국민 대중을 대표한다고 말하지만, 그 국민은 그들을 선출한 적이 없다.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 한때는 대중의 자발성을 찬양하던 NGO들이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을 가라앉히고 상층의 협상에 치중하곤 한다. 이번 촛불 운동에서도 NGO들은 초반에 사회단체의 개입이 시민들의 자발성을 해칠 수 있다며 적극 개입하기를 주저했지만, 정작 시민들의 능동성이 정권 퇴진 문제까지 제기할 정도로 발전하자 퇴진 요구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했다.

사회운동 NGO들이 사회운동에서 한 커다란 기여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이들과 함께 운동을 건설하면서도 개혁주의와 단일쟁점주의가 아니라 근본적 변혁과 총체적 세계관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변혁운동 활동가들의 몫이다.

NGO 정치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격주간 <다함께> 65호에 실린 타이 사회주의자 자이 자일스 옹파콘의 기사 ‘NGO 정치’를 보시오.(웹사이트 이 기사에 바로 링크돼 있습니다.)

조중동 반대 네티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조명훈

이명박의 BBK 의혹을 덮는 데 앞장선 떡값 검찰이 또다시 권력의 심부름꾼을 자임하고 나섰다. 지난 7월 8일, 검찰은 ‘조중동 광고중단’ 활동을 열심히 해 온 네티즌 20명을 출국금지시켰다.

삼성 이진희 등 수천억 원대 비리를 저지른 재벌에게도 좀처럼 내리지 않는 출국 금지 조치를 인터넷 상에서 불

매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내린 것은 황당무계한 정치 탄압이다.

무엇보다 기업주와 지배자들의 이익을 위해 왜곡과 거짓말을 일삼는 ‘이명박 짜라시’ 조중동에 맞서 광고중단 활동을 벌인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얼마 전 <중앙일보>는 자사 기자를 일반 시민으로 둔갑시켜 미국산 쇠고기 판매 식당이 잘 되는 것처럼 꾸몄다가 들통 나기도 했다.

검찰은 처음엔 광고주에 대한 협박

이나 폭언 등 구체적 행위 등을 핵심수사 이유로 꼽더니 이제와 “2차 보이콧(노동조합이 유리한 협상을 위해 회사와 관계된 제3의 업체를 압박하는 행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하고 주장한다. 그조차 냉전 시대 미국의 노동악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정작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의 2차 보이콧을 이런 이유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

미친 정부의 심부름꾼이 벌이는 미친 탄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촛불과 노동조합 운동

최미진

6월 10일에 1백만 촛불이 모였을 때, 모두 매우 고무됐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하다. ‘그래도 이명박이 양보하지 않으면?’

이때 촛불 운동의 주요 요구를 현실화할 결정적인 힘이 사용되지 않은 것이 우리 편의 약점이었다. 그 힘은 바로 노동자들의 파업이다.

노동자 파업의 위력은 백 마디 말보다 화물연대 파업이 잘 보여 줬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주요 항만과 물류가 모두 마비됐고, 이명박은 서둘러 양보를 해야 했다.

만약 화물연대뿐 아니라 다른 주요 노동자 부문들의 파업이 잇달아 벌어졌다면? 민주노총이 ‘고시 강행 시 전면 파업’이라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면? 그 힘이 촛불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평상시에는 파업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민주노총이 파업 계획을 발표하자 많은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그러나 촛불 진영의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생산 현장에서 발휘되는 노동계급의 힘을 촛불 운동에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소속단체인 민주노총이 이 힘을 사용하도록 적극 개입하기보다 “민주노총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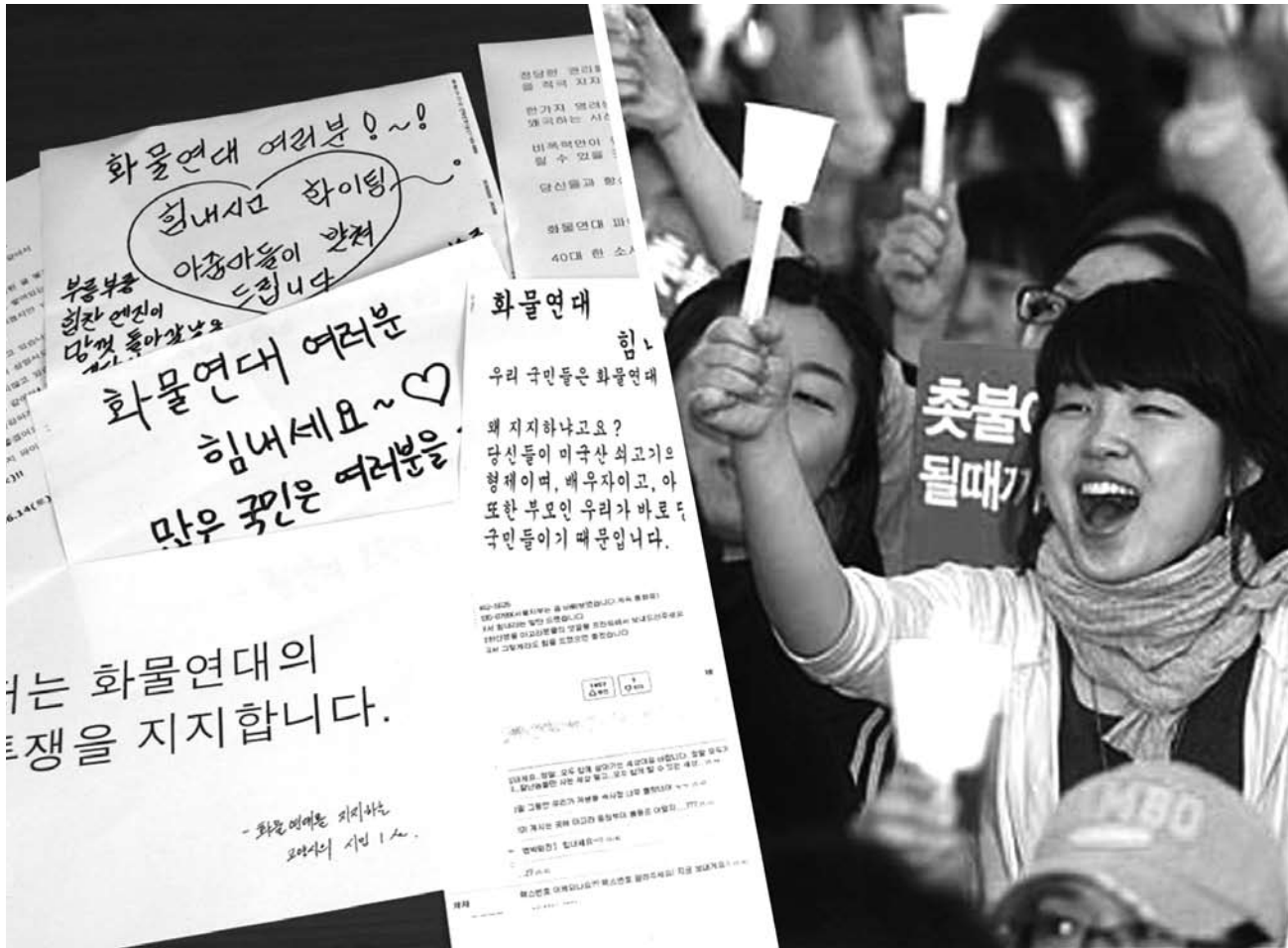
민주노총 지도자들도 대부분 이 과제에 소극적이었다. 파업 찬반투표는 일찌감치 마쳤지만, 파업은 투표가 끝나고 2주 반 뒤에야 실행됐고, 그것도 두 시간 동안만 벌어졌다.

촛불 운동 시기에 벌어진 노동조합 고유의 쟁점을 둘러싼 집회와 행진 등은 종종 시청의 촛불들을 코앞에 두고 청계광장에서 멈췄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

이것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는 노동조합주의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노동조합 지도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시기 동안 노동조합원의 다수는 정치와 경제 사이에는 확연한 분리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정부는 바로 이 악한 고리를 집중적으



(좌)촛불 시민들이 보낸 화물연대 지지글들, (우)이명박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노동자 파업의 위력을 촛불에 더했다면 노동자와 촛불의 미래가 더 밝아졌을 것이다

로 두들겼다. 정부는 ‘정치 파업은 불법’이라며 민주노총 파업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즉 정치와 경제의 영역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영역에서는 기업주와 노동자의 대립이 있고, 정치 영역에서는 정부와 시민의 대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은 화물연대 파업 당시, ‘기업주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지 않았다. 정부는 파업 파괴를 위해 직접 진두지휘에 나섰다. 이명박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윤을 위한 기업의 무한 권리 — 공공서비스와 의료를 상품화할 권리, 대운하를 파서 건설업체들과 땅부자들이 막대한 돈을 챙길 권리,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길 권리 — 다.

따라서 촛불 운동과 같은 정치 투쟁의 성패는 노동계급이 나날이 마주치는 ‘경제’ 문제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도 “공공부문을 사유화하면 공공요금, 영어 몰입교육을 하면 학원비가 치솟는다”고 인정하지

않았던가.

정치 투쟁은 협소하게 이해된 정치 쟁점을 둘러싸고 싸우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쟁점의 성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싸운다는 투쟁 방식이다. 경제적 쟁점을 둘러싼 투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한 작업장을 뛰어넘어 여러 산업으로, 산업 집중 지역으로 확산되고, 전국적인 양상으로 벌어진다면 그 투쟁은 **정치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주로 내건 파업이 아니더라도, 각 노동조합별 쟁점을 둘러싸고 **다 함께** 투쟁과 파업을 벌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랬다면 그 자체로 정부의 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정치적 투쟁이 됐을 것이다.

자기제한적

파업이 정치화하지 못한 데에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개혁주의적 소심함도 작용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종종 투쟁을 앞장 서서 조직한다. 그러나 사용자들과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 협상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삼는 노동조합 상근간부층의 특성 때문에 자기제한적 경향도 발전한다.

이번 촛불 운동에서도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대부분 파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파업 찬반투표도 조직했지만, 파업을 연기·축소하는 등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고무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민주적으로 결성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노동조합주의와 여기서 비롯한 노동조합 상근간부층의 소심함은 투쟁이 정치화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약점을 드러낸다.

따라서 산업 현장 활동가들은 촛불의 활력과 역동성을 노동조합 속으로 가져와 동료들에게 투지와 정치적 자신감을 심어주려 노력해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적 현장조합원 운동을 구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윤 옹호자의 본색을 드러낸 민주당

안형우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국회 등원을 합의했다.

민주당은 6월 25일 이명박이 고시를 강행하자 ‘야당과 국민에 대한 제2의 선전포고’라고 반발하며 재협상을 요구했고, 이후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민주당 의원까지 폭행하자 어청수 해임을 요구했다.

이런 문제들 중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해결책으로 주장해 오던 가축법 개정안은 “추가협상 내용과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땀집 합의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일부 SRM을 허용하고 검역 주권도 확보할 수 없는 초라한 법안조차 약속받지 않고 등원하는 것이다.

이명박이 시청 광장까지 원천 봉쇄하고 공안탄압의 강도를 높이는 이 때, 이런 식으로 등원하는 것은 이명박을 돕는 일이다.

초라한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다. 새로 민주당 대표가 된 정세균은 2006~2007년에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며 한미FTA 체결에 일조했다.

그래서 정세균이 당대표가 된 후 〈프레시안〉 임경구 기자는 “장기적으로는 한미FTA,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 정책, 공기업 민영화 등 경제정책의 핵심적 의제에선 여권과의 유연한 관계 형성이 예상된다”고 썼다. 이런 민주당이 등원해서 촛불을 대변할 리는 만무하다.

더군다나 민주당 등원으로 이명박이 주문해 온 소위 ‘민생법안’ — 한미FTA 비준, 재벌 감세,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 이 통과될 길이 열렸다.

제국주의 전쟁 동참인 레바논 파병 연장도 18일이 넘어가면 불법이 되므로 한나라당이 서두르고 민주당이 도울 일 중 하나일 것이다.

광우병, 과학, 자본주의

1990년대 영국에서 광우병 공포가 전국을 휩쓸었다. 그때 영국 정부·기업이 진실을 왜곡하는 모습은 지금의 이명박 정부 못지않았다. 맬컴 포베이는 영국의 사회주의자이자 리즈 대학교 식품물리학과 교수로 한국의 촛불 운동 참가자들을 위해 특별 기고문을 보내 썼다. 그는 본문에 언급된 레이시 교수 방어 운동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 글에 소개된 영국의 사례와 교훈은 한국의 촛불 운동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와 식품업, 과학과 과학자 등이 이윤 체제에 의해 제약받고 심지어 부패하는 모습은 영락없이 닮았다. 영국의 축산업 자본가들이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반국들에 수출하는 것도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과 닮았다(한국은 반국이 아니지만 말이다.)

맬컴 포베이

지금까지 영국에서 광우병(BSE)으로 죽은 사람들은 80명이 넘는다. 2000년에 발간된 영국 광우병 보고서인 〈윌립스 보고서〉(이하 보고서는) 13만 6천 명이 사망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가 광우병에 감염되는 사례는 줄고 있지만 2000년에만 광우병 의심 사례가 45건이나 보고됐다. 독일에서는 10건이 발생했을 뿐인데도 농무부 장관이 사퇴해야 했다.

광우병은 끔찍한 퇴행성 뇌질환이다. 그런 질병은 대부분 천천히 발발해 증상이 확인돼 드러나기까지 15~20년이 걸린다. 최악의 경우 지금까지 발병한 사례들은 단지 대규모 발발의 전조현에 불과할 수도 있다. 앞으로 10~15년이 지나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광우병은 [정부와 기업들이] 다른 모든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고 이윤만 추구한 결과다. 대기업들은 육류 산업을 지배하면서 우리 먹거리리를 오염시켜 왔다. 역대 영국 정부는 식품 안전보다 이윤 창출을 더 중시하는 대기업을 도왔다. 게다가 정부는 대기업의 범죄 행위를 덮으려 애썼다.

식품 산업은 대중매체, 사자총 모임, 과학 학술회의, 수백 개의 위원회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거기 참가한 대학교수나 공무원 들은 나중에 식품 회사 이사로 발탁되기도 한다. 이것은 국방 산업에서 [계속 들락날락하는] ‘회전문’ 현상으로 불리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식품 산업에 대한 비판은커녕 그것이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은 ‘회전문’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 준다. 그런 분석에 기초한 보고서의 대안이 과연 광우병 발병을 막출 수 있을까?

이윤 추구

자본주의 사회는 이윤 추구 경쟁에 따라 움직이며, 이윤 경쟁을 정당화하려고 책임 전가 대상을 찾는다. 기업들은 결코 방어할 수 없는 것들을 방어하고 연구화한다. 이런 요인들은 모두 과학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 이윤 체제 방어가 인간 건강보다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보고서의 저자 윌립스는 ‘회전문’ 현상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윤을 위한 식품 생산이 광우병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명백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런 결론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기에 윌립스는 속죄양 두 명—키스 멜드럼 수석 수의사와 도날드 애치슨 수석 보건장관—에게 죄를 떠넘겼다.

다만, 윌립스가 과학자인 김벌린을 비판한 것은 옳다. 김벌린은 1988년 사우스우드 경을 대표로 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두 번째 모임에 참석해 광우병의 위험에 대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김벌린 박사가 특별조사 위원회에 증거물을 제출했을 당시, 그는 소의 부속물을 제품에 계속 넣을지 고민하고 있던 애완동물 사료업체(페디그리)의 자문위원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광우병의 위험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그의 작업은 아직 완료되

지 않은 상태였다. 김벌린 박사는 이 작업을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해 왔고 그가 광우병 위험을 사우스우드 특별조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그의 고백[애완동물 사료업체]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듬해 5월, 프리온 관련 질병의 권위자인 김벌린 박사의 조언에 따라 페디그리는 자사 제품인 애완동물 사료에서 소와 관련된 물질들을 없애기로 결정했다(페디그리는 광우병과 관련한 조언을 얻기 위해 1988년 7월까지 김벌린 박사를 유입했다). 특히 페디그리는 영국산 소의 척수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 일부 척추골·비장의 구입을 중단했다.” 그러나 심지어 1995년 8월 까지도 이런 엄격한 조처들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다.

김벌린의 사례는 이른바 ‘자문위원’ 제도가 어떻게 대학의 과학 연구를 상업적 고려에 따라 좌우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과학은 공공 자산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소유하는 상품이 됐다.

자본주의는 광우병 연구를 어떻게 왜곡했는가?

그런데 이미 다른 많은 과학자들이 광우병의 위험을 알고 있었다면 왜 그들은 그것을 경

고하지 않았을까? 먼저, 영국 중앙수역원은 광우병 발병을 비밀에 부쳤다. 정부는 1993년까지 대학 과학자들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둘째, [신자유주의로] 연구비가 삭감됐다. 육류연구소와 국가낙농업연구소가 폐쇄됐다. 대체는 국가가 개입해 온 영역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전에는 정부 재정 지원 덕분에 그 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은 정치인·산업계 인사들과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소들이 폐쇄되면서 많은 저명한 과학자들이 은퇴해야 했다. 남은 과학자들은 연구비 삭감을 두려워하며 상업적 연구로 발길을 돌렸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로즐린연구소다. 이 연구소는 ‘복제양 돌리’를 개발해 유명해졌는데, 현재 많은 상업 벤처 활동에 연루돼 있다.

셋째, 정부는 과학자들의 말이 아니라 기업인들의 말만 듣는다. 정부와 식품 산업의 광우병 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리즈 대학교의 레이시 교수는 자기 주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부단하게 노력해야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자 동료 연구자들은 레이시가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른 과학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므로 식품 산업과 정부는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었다.

레이시는 여론과 일부 언론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정부와 식품 산업은 ‘대중적 히스테리’와 ‘과학적 보수주의’가 광우병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했다. 광우병 위험에 진지하게 대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런 일이었다. 심지어 같은 대학교의 연구자들도 레이시를 공격했는데, 레이시의 발언으로 기업들이 대학 연구비 지원을 삭감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또, 과학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자유주의적 태도—특히 과학과 정치는 일정 정도 대립된다는 생각—는 농림부와 식품 산업계가 레이시 교수를 쉽게 고립시키는 데 일조했다.

레이시 교수가 있는 리즈 대학교의 임상 미생물학과는 문을 닫았고, 그도 퇴임했다. 레이시 교수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1990년에 리즈 대학교에서 레이시 교수가 동물 생리학 및 영양학과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을 때만 해도 광우병을 우려하는 데는 그럴 만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는 것이 명백했다.

레이시 교수는 당시 세미나에서 광우병이 중간 장벽을 뛰어넘어 인간들 사이에서 번져갈 가능성을 걱정하며 그 근거를 제시했다. 그의 주장은 상당한 공감을 받았다. 레이시 교수의 과학적 사례들을 반박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몇 달 뒤,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동료 교수들은 대학의 경관물인 〈리포터〉에 편지를 보내 레이시 교수를 맹비난했다.

사실, 그들이 과학적 근거도 없는 이론으로 무장해 레이시 교수를 공격한 데는 조만간 더 큰 학과로 통합될 자신들 학과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주된 원인은 농림업업식품부·보건부와 손잡은 식품 산업계의 로비였다.

식품 산업계의 주요 기업들은 리즈 대학 부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레이시 교수를 통제하라고 압박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레이시 교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캠페인을 건설

해 레이시 교수를 지지한 다른 많은 과학자들의 행동을 이끌어 냈다면 상황은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러나 레이시 교수와 그의 주장에 공감했던 과학자 중 누구도 우리가 무엇에 맞서 싸우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

과학자들에게
압력 넣는
식품 기업들

식품
기업들의
정부 로비

광우병 쇠고기는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대형 식품
기업들의
이윤 지상주의

정부의
식품 기업 두둔

정부의 식품 안전
규제 완화

영국에서 광우병 발생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 메이저 총리는 영국 식품 기업의 이익을 위해 광우병에 관한 진실을 덮으려고 인간형을 썼다. 1990년 5월, 당시 농림부 장관 겸머는 자신의 딸과 함께 TV에 출연해 “쇠고기가 안전하다”며 직접 햄버거를 먹는 쇼를 연출했다(왼 사진)

겸머 씨는 “광우병이 동물에게서 인간에게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침착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 증거에 비춰볼 때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7년, 겸머 친구의 딸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다.(오른 쪽 사진)

지 못했던 것 같다.

광우병은 과학적 성과가 불가피하게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 설사 전에는 과학자들이 위협스럽게 이 문제를 무시했을지라도 말이다. 사실,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과학은 형편없이 타락하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는 과학 활동에 대한 기업의 지배와 그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역동성과 그 나름의 상대적인 독립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된다. 또한 과학자들 대부분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단체로 조직돼야 한다. 특히 이것은 정부가 부추긴 시장주의로부터 대학 연구를 지켜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의 대응

그렇다면 광우병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보수당과 노동당 정부는 자신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 보고서도 “영국 정부가 광우병에 관해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농림부 장관 겸 겸머가 자기 자식에게 쇠고기 햄버거를 먹이던 장면을 기억하는 수많은 영국인들에게, 또 그 말을 믿고 영국 쇠고기를 수입한 나라 사람들에게 이것은 황당한 결론이다.

맥도날드 같은 기업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쇠고기의 원산지가 어디고 그것이 어떻게 가공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쇠고기를 입수하는 과정은 일반 슈퍼마켓과 다르지 않다. 맥도날드는 얼어서 도착하는 쇠고기 덩어리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모른다.

1990년과 1995년 사이 광우병에 대한 통제가 시작되기 전에 엄청난 양의 오염된 [가공] 쇠고기가 냉동 창고에 보관돼 있었고, 이것들은 쇠고기 햄버거 같은 분쇄육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돼 신선한 쇠고기들과 섞여서 시장에 조금씩 반입됐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

최악의 사례는 영국 식용고기 산업이 광우병 관련 물질들을 의도적으로 반국들에 수출한 것이다. 예컨대 프로스퍼 데몰데사(社)는 광우병이 발생한 뒤로 유럽과 그 밖의 다른 나라들, 주로 인도네시아·태국·스리랑카로 식용 고기·뼈를 수출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최근 광우병 발병이 증가한 것은 영국 소와 광우병 감염 사료가 수출된 결과다.

인간 건강에 광우병이 끼칠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매우 많다. 그러나 식품안전들이 아직도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1억 5천만 파운드(약 3천억 원)의 예산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보수당 정부는 검사관 수를 엄청 줄였고 권한도 축소했다. 노동당 정부도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한 일이 거의 없다.

정부는 또 분쇄육 생산 과정에 훨씬 강력한 통제를 가할 수 있다. 정부는 쇠고기가 광우병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쇠고기 구입을 금지해야 한다. 만일 1989년 보수당 정부가 구역역이나 돼지 콜레라를 다룰 때처럼 광우병을 다뤘다면, 가족 도축 정책만으로도 인간의 먹이 사슬에서 비롯한 병들을 근절했을 것이다.

만일 당시 정부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적용해 광우병 감염 동물들을 완전히 폐기하고 사료로 이용되는 것을 즉각 금지

했다면, 광우병이 인간 건강에 끼칠 효과는 최소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약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광우병 감염 소가 일 년에 45마리씩 발견되고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간 광우병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효과적인 식품 정책이라면, 식품 생산의 모든 측면을 계획하고 통제해야 한다. 이 계획은 공중보건 정책과 발을 맞춰야 하고 무엇보다 식품 생산에서 소비자나 노동자의 요구가 우선돼야 한다.

과학은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물음들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과학자들은 책임감도 없고 선회되지도 않은 고위 공무원들의 위원회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중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전 세계적 위기 앞에 무능한

G8

한구한

사상 최대의 비용(6천억 원)을 들인 화려한 회담도 G8 국가들의 심각한 위기를 가리지는 못했다. 유가 폭등, 심각한 인플레이션, 금융경색 공포는 이들을 비껴가지 않았다.

정치 위기도 심화해 조지 부시, 고든 브라운의 노동당, 후쿠다 야스히로, 사르코지는 겨우 20~30퍼센트의 지지율을 넘나든다. 특히, 부시는 “7년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지난 6월이 가장 힘들었다”며 이번 회담에서 급박하게 추가 지원을 구걸했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았던 아프리카 원조 문제는 이들의 관심에서 밀려났다. 이번에도 G8은 원조액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들은 2005년의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물론 이조차도 원조를 빌미로 아프리카 자원 쟁탈전에서 한몫 잡겠다는 꿈수가 숨어 있다.

이번 회담에서 G8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비열한 이혜타산과 책임 떠넘기기 때문에 폐막식에서 그들이 내놓을 해결책은 상호 모순적인 임기응변이 고작일 것이다.

부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퍼센트로 낮추자는 일본과 유럽연합의 폐지되한 목표치(전문가들은 이 때까지는 적어도 80퍼센트를 감축해야 한다고 본다)조차 거부했다. 부시는 “중국과 인도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버텼다.

“식량값 폭등으로 지난해 5천만 명이 새봄께 기아 상태에 빠졌다”(UN식량농업기구)는 보고가 있지만, G8의 해결책은 곡물 생산국들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농업 생산량을 증대한다는 전형적인 시장주의적 접근이다.

투기자금

그러나 현재 식량 위기는 농업 생산량이 적어서가 아니다. 얼마 전 (가디언)이 폭로한 세계은행 보고서를 보면 바이오 연료(와 이를 둘러싼 투기)가 식량값 폭등에 75퍼센트의 영향을 끼쳤다.

고유가에 대처하는 G8의 자세는 금방어의 지능을 떠올리게 한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자고 떠든 지 몇 시간이나 지났다고, 산유국의 석유 증산과 시설 투자 확대를 떠올려냈다.

고유가와 식량가격 폭등의 배후에는 투기자금이 있지만, 열강들은 투기자본 규제에는 관심도 없다.

한편, 지정학적 경쟁의 격화도 계속됐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미국은 MD 문제로 또다시 마찰을 빚었다. 부시는 이명박과 만나 MD 참가와 미래 한미 군사동맹의 비전을 논할 것인데, 중국은 이를 자신을 겨냥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결국, G8은 위기의 해법을 두고 우왕좌왕할 뿐 어느 것 하나 분명하게 합의된 게 없다. 대신 이들은 한결같이 위기의 대가를 평범한 민중에게 떠넘기려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한 서방 외교관의 말처럼 “만약 올해 [회의]가 보여 준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 모든 쟁점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파인애플타임스) 따라서 저항 운동은 체제의 작동 방식 자체에 문제제기 할 필요가 있다.

올해도 7월 5일 회담장 근처에서는 G8에 반대해 세계 각지에서 온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가 전투적으로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활동가들의 입국조차 거부했던 일본 정부는 이날 시위대 4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열강들이 강요하는 야만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의 촛불시위도 이런 “다른 세계”를 향한 저항의 일부다.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③4

여성 차별에 대한 가부장제 이론과 맑스주의 이론

1. 가부장제 이론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으로 부차적인 지위에 있다. 분명히 그 정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 패턴은 비슷하다. 기업·국가의 고위직과 상층 전문직은 대부분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재산도 더 많고 소득도 더 높다. 여성은 물리적 폭력과 성폭행에 훨씬 더 많이 시달린다. 여성은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대부분 떠맡고 있고, 그래서 더 넓은 사회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약당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보수적 설명이 여전히 전 세계에서 유력한데, 이런 설명은 남녀 평등에 대한 입발림 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남성의 우위를 정당화한다. 즉, 남성의 우위는 자연의 섭리이므로 과거에도 항상 남성이 여성보다 유력한 지위를 점했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설명의 가장 조야한 형태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에 초점을 맞춘다. 남성이 여성보다 힘이 더 세다는 식이다. 그러나 더 현명한 주장은 유전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남성은 능동

적·진취적·경쟁적 성향을 보이게 돼 있는 반면, 여성은 수동적·수정적 성향을 보이게 돼 있다는 것이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받아들여지는 이 보수적 인간본성론의 주된 대안은 흔히 ‘가부장제’ 이론이라고 부르는 주장이다. 가부장제 이론의 목표와 내용은 남성 우월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다. 오늘날 사실상 전 세계 페미니스트들의 다수는 이런저런 형태의 가부장제 이론을 지지한다.

모호한

가부장제 이론의 주된 문제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가부장제 이론이 종류가 많은데다 아주 모호하고 분명한 형태도 없어서 뭐라고 꼭 짚어 설명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어떤 분야에서, 특히 학계에서는 이런 모호함이 오히려 장점이 된다는 점을 지적해 뒀야겠다.) 둘째는 가부장제 이론에서 특정한 구체적 주장을 발견한다손 치더라도 그런 주장은 오히려 보수적 설명과 놀랄 만큼 비슷한 것으로 귀결된다. 보수적 견해가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주장을 가부장제 이론은 부정적으로 인정할 뿐이다.

유물론

평등을 현실적 가능성으로 만들기 위해 상황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부장제 이론이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보았다. 이제는 맑스주의 이론이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맑스주의는 여성 차별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됐지만 결코 보편적 이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오히려, 수십 만 년 동안, 그러니까 약 1만 년 전 농업이 발전하기 전에 **모든** 인간이 수렵·채집 활동으로 먹고 살았던 시기에 여성은 결코 체계적으로 차별받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인류 역사의 95퍼센트가 넘는 대부분 기간에 여성과 남성은 대체로 평등하게 살았다. 따라서 차별이 아니라 평등이 인간 사회의 상궤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먼저, 19~20세기까지 살아남은 수렵·채집 사회들을 인류학

‘가부장제’라는 말은 ‘아버지의 지배’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이 용어는 처음에 인류학자들이 아버지/남성 가장이 다른 성인 남성들을 포함한 가족 성원 전체에 대해 대체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가족 구조를(따라서 사회도) 묘사하는 데 사용됐다. 그러나 현대 페미니즘에서는 가부장제라는 말이 그런 뜻으로 쓰이지 않는다. 가부장제는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지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남성의 지배’를 뜻할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난관에 봉착한다. 남성의 특세를 그리스어를 빌려 남성의 지배로 설명한다고 해서 뜻이 더 분명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부장제 이론은 남성이 특세하는 원인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불행히도 이 물음에 대한 일반적 정답은 없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남성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대다수) 남성들의 유전적 또는 심리적 구조 속에는 여성을 천대하도록 유도하는 뭔가 타고난 것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내가 가부장제 이론과 보수적 견해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런 주장은 마치 16~19세기에 미국

에서 흑인들이 왜 노예가 됐느냐는 질문에 흑인들은 노예가 되도록 타고났다는 대답을 듣자 분개하며 “아니다, 그것은 백인들이 노예 소유주가 되도록 타고났기 때문이다” 하고 대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남성의 본성?

이 점과 관련해서, 가부장제 이론이 지난 1960~70년대에 주로 여성 차별에 대한 맑스주의적 설명에 반대하면서 발전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 해방 운동 — 당시 그렇게 불렀다 — 은 미국에서 기존의 급진 운동들 내에서 시작됐다. 주로는 사회에서 여전히 지속되는 남성 우위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됐지만 부분적으로는 운동 **내부**의 여성 차별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 여성 운동의 많은 지도자와 이론가들이 맑스주의를 비판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맑스주의가 여성 차별 문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언론계와 학계에서 출세하기를 염원하는 중간계급 여성이었던지라 노동계급 투쟁을

》 11면 위로 이어짐

》 10면 위에서 이어짐

강조하는 이론을 본능적으로 싫어했다는 것도 한 이유였다.

그들의 주장인즉슨 대체로 다음과 같다. 맑스주의는 여성 차별의 원인이 자본주의이고 오직 사회주의만이 여성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여성 차별은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오래됐고 소련·중국·북한 같은 맑(脫)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여성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 맑스주의는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지배계급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지배계급·중간계급 여성을 포함해 **모든** 여성이 차별받고, 노동계급 남성을 포함해 모든 남성이 여성을 차별한다. 맑스주의는 여성 천대를 경제와 계급 착취의 문제로 설명하지만, 사실 성차별에는 성서나 유교 경전 등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독자적인 **이데올로기**의 요소가 존재한다.

이런 주장들의 결론인즉슨 맑스주의는 여성 차별을 설명할 수 없고, 남성의 권력은 자본가 계급의 권력과 별개로 존재하고, 따라서 여성 평등을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따로따로 전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오늘날 이른바 ‘가부장제’ 이론의 핵심 사상이 됐다.

사실, 맑스주의에 대한 이런

비판은 대체로 진정한 맑스주의가 아니라 스탈린주의(옛 소련 문제 등으로 제기된다)에 대한 반발이었거나 맑스주의 이론에 대한 잘못된 해석(예를 들어 맑스주의는 여성 차별의 기원이 자본주의라고 **결코** 주장하지 않았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점은 둘째로 치더라도, 가부장제 이론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발전하다 보니 여성 차별의 근원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독자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낡은 인간/남성 본성론에 의지하게 돼 버렸다.

목인

그래서, [가부장제 이론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계급 분열이나 계급 착취와 무관하게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했는가? 고서(古書)와 경전 들을 저술한 남성 성직자·철학자·율법학자의 본성에서 비롯했다. 남성 권력이 계급 권력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면, 그것은 남성의 권력욕 때문이다.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계급 없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더라도 여성이 해방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남성이 계속 여성을 천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들이 남성이고, 여성 천대가 그들의 본성이니까. … 기타

등등.

가부장제 이론의 궁극적 결함은 그것이 맑스주의나 사회주의자들 또는 노동계급 남성이나 심지어 남성 일반을 중상모략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 해방의 전망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성 권력이 보편적일 뿐 아니라 초역사적인 것이라면, 그리고 모든 남성이 대체로 성차별적이라면, 그리고 바로 그 남성들이 세계의 부(富)와 생산을 대부분 지배하고 권력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무기를 통제하고 있다면, 그리고 노동계급 남성이 여성의 동맹 세력이 될 수 없다면, 심지어 사회주의 혁명도 남성의 지배를 끝장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가부장제 이론이 실천에서는 흔히 체제를 수용하고 여성 차별을 목인하는 외피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간계급 페미니스트들이 말로는 급진적 언사를 남발하면서도 실제로는 대다수 노동계급 여성들의 진정한 해방은 내팽개친 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그들 자신만의 출세 — 여성 국회의원, 여성 교수, 여성 최고경영자(CEO)의 수를 늘리는 것 — 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맑스주의는 여성 차별의 뿌리에 대한 진정한 역사적 설명과 여성 차별을 끝장낼 수 있는 진정한 전략을 제시한다.

불법 비자금으로 호화미술품을 사들이고도 처벌받지 않은 이견희의 처 총라희(위)와 모래밥을 먹어야 하는 건설노동자들(아래) — ‘천대받는 여성’과 ‘지배하는 남성’?

2. 맑스주의 이론

만족스런 이론은 첫째, 유물론적이어야 하고 둘째, 역사적이어야 한다. 내가 말하는 유물론적이라는 의미는 열등하거나 부차적인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현실의 물질적 사회관계 — 사회의 경제적 발전 단계와 관련된 — 에서 비롯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 차별을 순전히 인간 본성 문제나 유전자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또, 단지 ‘문화적’ 문제로 치부할 수도 없다. 문화적이라는 의미가 남성이 스스로 우월하다고 믿거나 여성이 스스로 열등하다고 믿는 것의 물질적 원인을 설명하지 않은 채 그런 믿을 때문에 여성이 차별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말이다.

내가 말하는 역사적이라는 의미는 여성 차별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물론 이것은 대략적 설명이지 꼭 집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차별을 설명하는 이론이 여성해방론이기도 하다면 남녀

평등을 현실적 가능성으로 만들기 위해 상황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부장제 이론이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보았다. 이제는 맑스주의 이론이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유물론

맑스주의는 여성 차별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됐지만 결코 보편적 이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오히려, 수십 만 년 동안, 그러니까 약 1만 년 전 농업이 발전하기 전에 **모든** 인간이 수렵·채집 활동으로 먹고 살았던 시기에 여성은 결코 체계적으로 차별받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인류 역사의 95퍼센트가 넘는 대부분 기간에 여성과 남성은 대체로 평등하게 살았다. 따라서 차별이 아니라 평등이 인간 사회의 상궤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먼저, 19~20세기까지 살아남은 수렵·채집 사회들을 인류학

자들이 조사·연구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루이스 모건의 선구적 연구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고전적 저작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을 썼다. (이 책에 나오는 인류학 데이터의 일부는 오늘날 틀린 것으로 판명됐지만 그 방법론은 여전히 타당하다.) 캐나다의

몽타네-나스카피 족을 연구한 엘리너 리콕의 《남성 우위의 신화》(Myths of Male Dominance), 콩고의 피그미족을 연구한 윌리엄 톰볼의 《숲 사람들》(The Forest People), 특히 칼라하리 사막의 이튼바 부시맨들을 연구한 리처드 리의 《콩산족: 채집 사회의 남성, 여성, 노동》(The !Kung San: Men,

Women and Work in a Foraging Society) 등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보여 주는 바는, 유목민들과 마찬가지로, 유목민들을 연구한 윌리엄 톰볼의 《숲 사람들》(The Forest People), 특히 칼라하리 사막의 이튼바 부시맨들을 연구한 리처드 리의 《콩산족: 채집 사회의 남성, 여성, 노

》 11면 아래로 이어짐

》 10면 아래에서 이어짐

회에서 물질적 평등이 대체로 보장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폭넓은 양성 평등은 주로 여성의 채집 활동으로 공동체 식량의 절반 이상이 공급됐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

맑스주의는 여성 차별이 서로 연결된 두 가지 중대한 사회 변화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수렵·채집 사회에서 농업 사회로, 그리고 계급 없는 사회에서 계급으로 분열된 사회로 바뀐 것이 그 변화다. 이 과정이 정확히 언제 시작됐는지 꼭 집어 말할 수는 없다. 세계적으로 그런 과정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략 1만~1만 2천 년 전에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오늘날의 이라크에서 나일강 유역에 이르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농업이 발전하면서 시작됐고 대략 5천~6천 년 전에 유력한 사회 편제 형태로 확립됐다고 할 수 있다.

계급으로 분열된 사회

농업이 시작되고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정착 생활도 시작됐다. 최초의 도읍들이 나타났고 처음으로 잉여 생산물 — 하루하루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의 재화들 — 과 함께 재산 축적 가능성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 초기의 잉여는 다수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하고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재산 축적, 즉 사유재산은 극소수 ‘지배계급’ 수중에 집중됐다. 이 새로운 지배계급은 자신의 재산(소떼나 토지 등)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 노예나 농민으로서 — 강요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특권을 지켜줄 국가 기구들(군대·성(城)·감옥·사법기구 등)도 건설했다. 수렵·채집 사회에서 농업 사회로 전환과 동시에, 생산 형태도 여성의 노동 — 주로 채집 — 이 남성의 노동과 동등하게 중요한 형태에서 남성이 사회의 부를 대부분 생산하는 형태 — 경작과 목축 — 로 전환됐다. 이것은 하루 종일 무거운 쟁기를 끌거나 소를 모는 일이 어린 아이들을 기르거나 돌보는 일과 양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회적 잉여와 국가를 통제하는 일을 주로 남성이 맡게 됐다.

이와 함께, 수렵·채집 사회의 특징이었던 자유로운 짝짓기와 집단적 육아 관행도 폐기됐다. 그리고 종교적·법률적으로 통제되고 남성이 우위를 점하는 배타적인 가족이 발전했다. 이런 가족 안에서 아내는 남편의 재산으로 취급됐고, 하는 일도 집안일과 자신의 자녀만을 돌보는 것으로 국한됐다. 이런 가족 형태는 사회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했는데(예컨대 일부

다처제). 무엇보다 지배계급 내에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확립됐다. 그런 가족 제도는 축적된 재산(토지·가족 등과 권력의 보존·상속을 보장한다는 경제적 기능도 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어디서나 여성이 남성보다 부차적 지위에 놓이게 됨을 의미했다. 엥겔스는 이를 두고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라고 불렀다. 따라서 맑스주의 이론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특정 발전 단계에서 여성 차별이 비롯했다고 본다. 또, 여성 차별이 생물학적 차이와 관계가 있다고 보지만(어쨌든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 범주다),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그렇게 됐다는 뜻이지, 생물학적 차이가 지금과 미래의 여성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뜻은 아니다.

자본주의

여기서 드는 의문은 ‘그토록 오래 전에 시작된 여성 차별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되고 비록 완화된 형태로나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분명히, 이 칼럼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고대와 중세 사회 그리고 아시아적 사회, 즉 공납(貢納) 사회에서는 심종팔구 재산 상속 기능이 남성 지배 가족의 존속에서 핵심이

었다. 이 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지만, 여성 차별이 체제에 도움이 되고 지배계급의 막대한 기득권이 걸려 있다는 면도 상당히 존재한다.

첫째, 남편과 자녀를 돌보는 것을 여성의 ‘타고난’ 본분으로 만든 덕분에 자본가 계급은 그들이 지금 부려먹는 노동자들과 차세대 노동자들을 거의 공짜로 재충전·재생산할 수 있게 됐다. 둘째, 가족에 현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지배계급은 더 광범한 계급 연대와 계급 의식을 가로막는 협소한 보수적 세계관을 부추길 수 있다. 셋째, 여성이 일할 ‘권리’, 특히 지도적 구실을 맡을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은 여성을 노동력인구의 2류 부문으로 만들어 더 낮은 임금으로 더 많이 착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가족 제도와 여성 억압에 부르조아지의 기득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완전한 여성 해방을 위해서는 노동계급의 단결된 투쟁을 통한 자본주의 전복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해서는 노동계급 여성뿐 아니라 노동계급 남성들도 남녀 평등과 여성 해방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존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다.

여러분의 편지를 환영합니다

촛불집회의 생생한 경험이나 이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을 <맛불>에 보내 주세요.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나 경험한 것, 함께 참가한 지인들과 나는 이야기 등 어떤 것이든 환영합니다. <맛불>은 정부의 촛불집회 비난, 조중동의 왜곡 등에 맞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독립적인 언론입니다. 촛불집회 참가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맛불>에 직접 실어 의견을 나누고 힘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생한 이야기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letter@counterfire.or.kr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거나 <맛불> 웹사이트(http://www.counterfire.or.kr)의 '독자편지 쓰기' 탭을 클릭하세요.

정규직 양보는 비정규직 해법이 아니다

두 달 전 5월 9일 나는 <한겨레>가 주최한 비정규직 법안 1년 평가 연속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목희·심상정(당시)의원, KTX승무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 요약문이 <한겨레> 6월 25일자에 실렸다.)

비정규 약법 통과와 지역인 민주당 이목희는 현행 법의 부자유용은 약력 기업주의 문제이지, 법의 약점이 아니라 고 했다가 참가자 거의 전체의 반발을 샀다. 그러자 이목희는 “외주화 문제는 예상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최악을 막으려면 현재 법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참가한 시민 패널들이 코웃음을 치자, 이목희는 ‘정규직 양보론’을 들고 나왔다.

정규직 양보론은 힘들게 투쟁해 온 비정규직 투사들마저 유혹하곤 한다. 정규직 노조의 소극적 연대에 원망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규직 양보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요구가 왜 정규직의 호주머니를 터는 요구로 바뀌어야 하는가.

물가 인상이 고통의 근원인 마당에 정규직 양보론은 분열을 조장할 것이다. 우리는 임금 양보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를 위한 투쟁과 단결을 호소해야 한다.

실제로 기간제 노동이 준 만큼 용역과 호출 근로가 늘어났다. 3백 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중 비정규직 평균 임금에도 못 미치는 노동자가 10.75퍼센트에서 12.47퍼센트로 늘어났다. 그 1년 사이에 주요 대기업의 순이익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도 촛불 항쟁처럼 확대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김문성

서울대

한나라당이 거짓말할 자유를 보장하자?

지난 7월 7일 서울대 총학생회가 촛불 시위 주제로 개최한 한나라당 의원 김기현의 강연이 광주병서울대대책위를 비롯한 5개 단체 소속 학생 50여 명의 저지로 무산됐다.

학생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편이 아님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라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서 당당히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반면 총학생회는 이번 강연회가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민주당, 한나라당을 모두 불러 공평하게 의사를 듣는 자리라며 강연회 저지 행위를 비난했다. 일부 총학생회 지지자들은 “나는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것을 말할 권리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지켜내겠다”는 볼테르의 말을 인용하며 총학생회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볼테르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것에 한겨해야 한다고 역설했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당사자들을 옹호하라고

강연도 못하고 쫓겨난 한나라당 의원 김기현

하지 않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해 촛불 여론을 죽이려 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한 일인가. 강연회를 저지한 학생들이 아니라, 애초부터 한나라당을 초청한 총학생회야말로 정신 차려야 한다.

정병호

조중동 뺨치는 검사의 항소이유서

나는 지난해 뉴코아·이랜드 투쟁을 지지해 뉴코아 점거 파업에 함께 했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8일 항소 재판을 받으려 법정에 섰다.

나는 지난 재판에서 벌금 1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나를 포함해 피고인 9명은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항소했다.

검사도 양형이 가법다며 항소했는데 검사 진동균이 쓴 항소이유서는 사실을 왜곡하는 게 조중동 뺨치는 수준이다.

역지 주장

검사 진동균이 항소이유서에서 우리가 “경찰관들을 폭행”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정치적 입지 확보 및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집단 점거를 선동했다”고 역지 주장을 펼쳤다.

나는 법정에서 노동자 운동의 대의를 옹호하고 검찰의 거짓말을 반박했다.

지난 호를 읽고

하루빨리 짐바브웨가 민주화하기를

7월 6일 KBS <특파원 현장보고> ‘짐바브웨, 공포정치로 꺾인 민주화의 꿈’을 시청했다.

이번 무가베의 재집권은 야당 후보인 창기라이가 피신해 선거에 불참하고 선거 부정과 폭력이 난무했기에 가능했다.

석 달 전 1차 투표에서 창기라이가 무가베를 앞서자 무가베는 무자비한 탄압에 나섰다. 창기라이는 네덜란드 대사관에 몸을 숨겨야 했다. 선거 당일 짐바브웨 수도는 유령도시를 연상케 할 만큼 인적이 없었다. 투표장에 가지 않고 길거리를 서성이다가는 경찰이나 여당 청년당원들에게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미 선거 전부터 야당 지지자들은 살해당하거나 다리가 부러지고 손목이 잘렸다고 한다. 국제 선거 감시단은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선거 폭력을 피해 유랑생활을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불안한 정치 상황에도 서방국가들이 경제제재를 하면서 민중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물가가 치솟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2백만 퍼센트를 넘었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짐바브웨의 부정·폭력 선거를 비난하고 있다. UN에서 각종 제재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윤양근 특파

독자 기고와 편지

안병만의 전력을 고발한다

이명박은 자신의 절친한 테니스 친구인 안병만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안병만은 내가 졸업한 한국외대 총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자인데, 1998년 첫 번째 총장 임기가 끝날 때 규정에 없는 전별금(작별 위로금)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2003년에는 업무추진비 수천만 원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주거나 교내 인사와 골프 치는 데 썼다.

그는 외대를 ‘기업경영마인드 대학’으로 만들려고 2004년 산학협력단을 출범시켰다. 그래서 학교가 직접 어학 교육 기업 ‘i-외대’를 만들어 영어교육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

2006년 정년퇴임하면서 안병만은 “학계에서 쌓은 경험과 연륜을 유능화한 기회”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지만, 현재 그는 그 경험을 평준화 해체와 교육 기회 박탈에 쓰고 있다.

바른 정책?

그는 지난 해 5월부터 이명박의 정책자문교수로 활동하면서 MB 교육정책의 가닥을 잡는 데 한몫했다.

특히, 그는 후보 시절 이명박의 싱크탱크였던 바른정책연구원의 이사장인데, 올해 1월 이 단체가 낸 <바른정책백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턴 영어몰입교육 실시, 초중고생 학업성취도 결과와 학교와 지역단위로 공개, 2012년까지 대입 완전 자율화 등 이명박의 경쟁 교육 강화 정책을 그대로 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내정된 직후에도 그는 “교육자율화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은 MB 교육을 바꾸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MB팬으로 화답해 “빠져선 반성”은 말뿐이었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 줬다.

김은영

letter@counterfire.or.kr 7월 14일(월)까지 독자편지를 보내 주십시오



촛불집회에서 공연하는 래퍼 디지 - 촛불이 뮤지션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저항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다양한 재능을 발휘해 집회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 ‘명박산성’ 벽면엔 그래피티(길거리 벽화)가 그려졌고, 촛불 시가 낭송되고, 무대 위 고등학생들은 울음을 펴쳤다.

즉석에서 랩을 펼친 고등학생 두 명도 있었다. 이들은 “나는 대한민국 학생 / 고3이라는 미칠 것만 같은 스트레스에서 살고 있어 / 하지만 내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 / 나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현재 그는 그 경험을 평준화 해체와 교육 기회 박탈에 쓰고 있다.

성공회대

안진걸 교수님을 돌려달라

정부의 광주영국민대체회의의 탄압은 우리 성공회대의 소중한 교수님을 구속했다. 대체회의의 조직법정으로 헌신적인 활동을 해 오신 안진걸 교수님은 고시가 강행된 6월 25일 경북교육청 학회비 한홍구 교수님과 신학대학원 김민웅 교수님, 안진걸 교수님이 출강하시는 한성대의 부총학생회장도 함께했다.

교수님은 2006년부터 성공회대에서 ‘NGO와 사회운동’ 강의를 하셨다. 열정적이고 탈권위적인 교수님을 많은 학생들이 좋아했다. 그러나 지금 교수님은 연행 탓에 한 학기 동안 수업한 정든 제자들의 성작도 내 주지 못하고 있다.

교수님이 구속되자 수업을 들은 학생

들,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회를, 자치단위들이 모여 ‘안진걸교수님석방을위한대체회의’를 구성했고 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27명이 참여했고 성공회대 교양학부 한홍구 교수님과 신학대학원 김민웅 교수님, 안진걸 교수님이 출강하시는 한성대의 부총학생회장도 함께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마저도 ‘불법집회’라며 두 차례나 해산 경고를 했다. 기자회견에서 들었던 팻말처럼 ‘짓밟을수록 촛불은 타오르지롱’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항의 행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박준은미

이 외에도 개인이나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이 다양한 이명박 정부 비판 음악을 만들었다.

평소 이들의 음악은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그러나 반(反)이명박 정서 덕분에 우호적인 청중이 많아졌다. 청중들은 이 음악들을 다시 인터넷에 유포하며 촛불 집회 참가를 호소하고 있다.

청년인턴 지원제도는 청년들을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돌려막기식으로 ‘취업’시켜서 청년실업에 대한 불만을 잠재워 보겠다는 기만책에 불과하다. 더 많은 청년·학생들이 거리로 나서서 함께 촛불을 들자!

태진

이종격투기 선수의 2MB 비판

6월 29일 이종격투기 경기가 ‘스피릿 MC 17 All in’ 재방송을 보게 됐다. 한국의 김윤영 선수와 미국의 랜든 쇼유티 선수가 맞붙었다. 그런데 이때 난 깜짝 놀랐다. 김윤영 선수가 “2MB 대통령님! 우리 국민들을 배부르고,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입장 하는게 아닌가. 김윤영 선수는 인터뷰에서도 촛불시위 참여 경험과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명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광범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김태현

병역 대체복무를 인정하라!

지난해 병역 대체복무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한 국방부는 아직까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매년 5백 명에서 8백 명의 청춘이 1년 6개월 감옥에 가면서까지 자기 신념을 지켜 결국 대체복무를 약속받았다. 이명

박은 지난 4월 UN인권이사회 때까지만 해도 2009년부터 대체복무를 시행한다고 하더니 이를 뒤집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한홍구 공동대표의 말대로 이는 “국제 사회에 대한 정부의 공신력을 해치는 행위”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35개 징병제 국가가 인정하고 UN인권위도 여러 차례 결의한 바 있는 국제사회 상식이다.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도 집총을 거부하는 종파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루빨리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

김재원

지난 호를 읽고

북한을 독재 사회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영화가 보여 주는 북한 민중의 실상에서 우리는 북한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노동자 대중이 극소수의 관료들에게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계급사회임을 알 수 있다.”(《맛불》 94호, ‘(크로싱), 탈북자의 고통과 비극을 생생히 고발하다’)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이북 사회를 위

와 같이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 또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전 세계 민중의 본질적 입장인 반미반제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북 정권은 미제국주의 세력과 이남의 수구보수 세력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미제국주의 세력과 수구보수 세력은 이북 정권과 민중을 분리하려 이북의

김태현

일회용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이명박

7월 2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경제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것들은 ‘팽창’(민주노동당 논평)일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연속이다.

한 가지 예만 들겠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하나는 청년인턴 지원제도다.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하면 6개월간 월급 50퍼센트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나는 한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말이 좋아 인턴이지 사실 단기계약 비정규직 사무보조원이다. 계약서에는 심지어 인턴의 월급은 “임금이 아니”라 “연수비”라고 돼 있다. 그러면서도 결근을 하면 ‘월급’은 깎인다!

기업가들, 친기업 언론들은 인턴 제도가 장래의 직장 경험을 미리 해 두는 ‘필수 경험’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계약 연장도 (거의) 불가능한 ‘일회용 청년 비정규직’이다.

청년인턴 지원제도는 청년들을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돌려막기식으로 ‘취업’시켜서 청년실업에 대한 불만을 잠재워 보겠다는 기만책에 불과하다. 더 많은 청년·학생들이 거리로 나서서 함께 촛불을 들자!

태진

<맛불>을 오해한 아저씨

<맛불> 판매 가판을 하는데 한 아저씨가 신문을 한 부 집더니, “에이 눈 버렸네”하고 뻔 던졌다. 그리고 “발행 단체가 어디냐”며 화를 냈다. 그래서 다함께를 소개하는 팸플릿을 드렸더니 유심히 읽어 보고는 “아, 굉장하지 미안하게 됐다. 나는 신문 제목이 ‘촛불’이 아니라 ‘맛불’이어서 보수단체가 ‘촛불’에 맞서는 ‘맛불’을 펴는 줄 알았다”하고 말했다. 나는 “이 이름은 서민을 태워 죽이는 전정파와 신자유주의의 불 같은 공격에 맞서서 놓는 ‘맛불’을 뜻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그렇게 들으니 굉장하마 음에 든다. 이런 신문을 주간으로 만들다니 놀랍다”며 지지금까지 주고 갔다.

김명구

포럼에 초대합니다

대학 맑스주의 포럼
747 파산과 경제위기 — 원인과 해법은?

연사: 김용욱(주2강) 7개
일시: 7월 23일(수) 오후 4시
장소: 이화여대(후주 공제)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2263-1106

주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간 <맛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웹사이트에서도 정기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counterfire.or.kr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 02-2271-2395
계좌 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백은진)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이탈 주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만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차별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차별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차별받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와 개혁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전면 파업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노동자들

7월 2일부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여 온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7월 8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임금 13만 원 인상과 상여금 50퍼센트 인상을 요구했다. 그런데 사측은 임금 동결 강요도 모자라 4백31명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경영난 때문에 노동자들이 희생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희생

그러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하고 중국과 베트남에 금호타이어 공장을 신설하는 등 해외 투자를 확대하면서 재정 적자를 키워 왔다. 그러다 위기가 닥치자 묵묵히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2004년 전면 파업을 통해, 불법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화시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의 모범을 보여 준 바 있다.



전면 파업에 돌입한 금호타이어 노동자들

지난 7월 5일에는 파업에 돌입한 수 천 명의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광주 촛불집회에 참가해 시민들의 엄청난 환호를 받았다.

경제 위기 시기에 사측은 어지간해서는 양보하지 않는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측에 강력한 타격을 주는 투쟁이 필요하다.

IMF 직후인 1998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36일간의 공장 점거 파업으로 사측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막아낸 바 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강력한 파업으로 경제 위기 시기에도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줘야 한다.

강철구

기대되는 노동자 투쟁

이명박 정부는 지난 2일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에 소환장을 발부했고,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확대 양산법으로 불러 온 비정규직법을 더 한층 개악하는 등 경제 위기의 고통을 죄다 노동자에게 전가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이 굶뒀던 노동자 투쟁이 조금씩 확대되는 듯하다. 지난 주 2시간 부분파업을 한 금속노조가 이번 주에는 4시간 파업을 조직했다. 이번에는 지난 번 파업에 불참했던 대우차 노조도 함께한다. 민주노총 지역본부별 파업도 준비되고 있다. 15일 경

기본부에 이어 전북본부와 광주전남본부가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사측의 해고 시도에 맞서 전면 파업을 시작했다.

확대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병원인력 확충·광우병 쇠고기 병원급식 저지 등을 내걸고 16일부터 찬반투표를 한 후 23일 파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앞둔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7월 5일 1만여 명이 참가한 ‘기간산업 공동투쟁본부’ 출범 집회를 했다.

이명박의 언론 장악 시도에 맞서 언론노동자들도 대규모 집회를 열어 투쟁에 나섰고, 전교조는 12일 ‘이명박 교육정책 전면전환 및 광우병 쇠고기 학교급식 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촛불집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 대상 ‘이명박 불신임 투표’와 공무원 감원 반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 지도자들과 현장 활동가들은 이런 투쟁 계획들을 꼭 현실화해야 한다. 촛불시위의 활력을 현장에 더 확산하고, 투쟁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충남

다함께에 가입하세요!

활동 소개 및 안내, 회원가입, 후원하기 등 각종 문의 사항은

02-2271-2395 또는 atgmail@nate.com 으로 연락주세요.

다함께가 주최하는 포럼이나 강연회, 거리 가판에서도 얼마든지 물어 봐 주세요.

조중동 같은 기성 언론은 진실을 은폐하려 합니다. 우리가 흩어진 개인이라면 부당한 권력에 맞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함께는 이 사회의 감춰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주간 〈맞불〉을 발간하고,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또한 거리와 대학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대중 행동을 함께하면서, 자본주의가 낳는 온갖 불의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명박에 맞선 저항이 승리하기 위해선 토론을 통해 효과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함께 실천하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다함께에 가입하셔서 여러 활동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참여해 보세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에 함께합시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694701-01-227958(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www.alltogether.or.kr

‘다함께’는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총파업과 2000년 프랑스 니스에서 있었던 국제 반자본주의 시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호였던 ‘투장상블’(Tous Ensemble)에서 따온 이름으로, 다양한 운동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편집자가 알립니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에서 용어를 일부 고쳤습니다.

● ‘북한 난민’은 협소하게 법률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들만

‘북한 이탈 주민’으로 고쳤습니다.

● ‘억압’이라는 용어는 여성, 동성애자, 소수 인종 등이 겪는 천대가

법률적 또는 개인 심리적인 것으로 협소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좀더 체계적인 천대를 뜻한다

는 의미에서 ‘차별’로 고쳤습니다.

● ‘개혁주의’ 대신에 ‘개혁주의’

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자는 불필요하게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을 도가 지나친 좌파처럼 비치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조중동의 전교조 탄압 “그래도 촛불과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송재혁

중학교 교사,

전교조 서울지부 공립중등관악동작지회장

전교조 일부 분회는 4·15 ‘학교자율화’라는 이명박의 교육쿠폰에 반대하는 펼침막을 학교에 내걸었으며,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펼침막 걸기와 학부모께 드리는 편지 발송을 추진중이다. 이를 냄새 맡은 일부 언론이 테러리즘을 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7월 4일자 <중앙일보>는 “전교조는 학교를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지 말라. 학교와 학생을 전교조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라는 훈계질을 하고 있다.

그러나 펼침막 설치에 교원노조가 자주적으로 시행할 권리로서 교원노조와 교육관청이 상호 합의해 만든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권리다. 교사의 편지통신도 교육자로서 학부모에게 교육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편지다.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기본권의 부정이다.

한미FTA가 좋은 것이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유인물을 학교에 마구 살포한 것이 누구였는가? 6월에 재향군인회가 학교에 대량 살포한 만화 <6·25전쟁 바로 알리기>는 또한 어떠한가? 화해·평화 교육에 익숙한 학생들을 다시금 반공 투사로 무장시켜 보겠다는 반시대적 노력이 눈물나게 역겹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언론 보도와 거의 동시에 공문이 왔다. “현수막의 내용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내용이나 교육정책



광우병 위험 쇠고기 급식에 반대하는 펼침막을 걸고 있는 전교조 교사

전반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일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 달란다. 한마디로 펼침막 내용은 정부 정책을 찬양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거다. “만일 학교장의 승인 없이 설치한 현수막은 학교장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학교 측의 철거도 가능할 것”이란다. 결론 그냥 떼어 버리라는 폭력적 행정 지시다.

“광우병 사태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와 자유의 뿌리를 흔드는 발상지가 학교의 특정한 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000 후보는 외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촛불시위의 진원지가 바로 전교조’라고 명쾌하게 얘기했습니다.” 7월 7일, 모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사무소 고문이 한 발언이다. 교원노조 탄압이 단기적으로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지금 5공 때인가? 촛불이 두렵고, 진실이 두렵고, 국민이 두려운 자들이여, 전교조의 펼침막을 떼어 낸다고 두려움이 사라지겠는가, 진실이 사라지겠는가, 국민이 용서하겠는가?

공무원의 이명박 불신임 총투표 정당하다

5만 조합원의 전국공무원노조가 대의원대회를 거쳐 ‘대통령 불신임 조합원 총투표’를 하기로 했다.

전공노의 발표가 있자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을] ...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최대한” 처벌하겠다고 했다.

미친 소 수입에 반대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뿐 아니라 연금 개악, 구조조정 그리고 민영화 정책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공무원이 이명박 ‘불신임 총투표’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전공노 웹사이트 자유게시판에는 지지글이 쇄도하고 있다.

불신임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전공노 조합원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17퍼센트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80.9퍼센트였다.

‘불신임 총투표’는 이명박 정부에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고, 파업으로 이어가는 가교 구실을 할 수 있다. 촛불 운동의 자신감을 높여줄 수도 있다.

따라서 전공노의 ‘불신임 총투표’는 반드시 성사돼야 하고,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등 다른 공무원 노조로 확대돼야 한다.

박천석(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촛불을 들고 강남 거리를 행진하다!

경찰이 시청 광장을 원천 봉쇄했지만 7월 8일 화요일 저녁 강남역에서도 촛불 행진이 있었다. 촛불을 켜 온 아고라 강남 직장인들, 민주노총 남동지구협 활동가들, 미친 교육을 걱정하는 전교조 선생님들, 공공서비스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지하철 노동자들, 강남·서초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당원들, 뉴코아 노동조합원들,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 강남·서초 노점상들, ‘다함께’·사회진보연대의 강남·서초 지역 회원들 등 1백여 명이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테헤란로 일대를 행진했다. ‘미친소·미친 교육 반대, 이명박 OUT’ 펼침막을 든 학부모와 교사, 고등학생들이 맨 앞에 섰다.

행진하는 대열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직장인과 젊은이들이 참으로 많았다. 집결 장소였던 제과점의 주인도 번잡스러움을 양해해 줬다. 신발 노점상 분들도 ‘좋은 일 하는데 장사가 좀 안 되도 된다’며 이해해 주셨다.

아고라 강남·서초 직장인 모임



7월 8일 강남역에 모인 ‘촛불’들

카페 운영자 분은 비가 와도 손상되지 않는 홍보물 만드는 법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다. 광우병 쇠고기뿐 아니라 수도 민영화 등 다양한 쟁점이 담긴 홍보물이었다.

60일 넘게 켜진 촛불이 이제 지역에서 이어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이것이 반(反)이명박 2라운드 선전포고의 출발이기를 기대해 본다.

신명희

성동구에서 진행된 촛불 행진

7월 4일 저녁 서울 성동구에서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주민 50명이 아이들과 함께 청계천 옆 산책로를 행진했다. 성동구 지역에 있는 정당,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공부방들이 모여서 만든 ‘미국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성동지역모임’에서 이 행진을 기획했다.

지역 공부방 어린이들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뇌송송’ 노래 공연으로 흥겹게 시작된 행진은 청년회, 민주노동당, ‘다함께’ 소속 활동가들의 주도로 구호와 노래를 하며 활기차게 진행됐다. 행진 참가자들은 광우병 문제뿐 아니라 의료보험 민영화와 대운하 반대, 미친 교육정책 등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행진중에 장애인 콜택시 운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왕십리 뉴타운 세입자대책위의 발언도 있었다.

나는 주변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초를 나눠주며 함께 행진하자고 권유했는데 청소년과 젊은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다.

이 행진은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촛불 운동을 건설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종우

〈PD수첩〉 표적 수사 즉각 중단하라

MBC 〈PD수첩〉이 사상 초유의 언론 탄압에 직면해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PD수첩〉을 본보기로 공격해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재갈을 물리려 한다.

훼손될 명예조차 없는 농림수산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PD수첩〉을 고발하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개폐처럼 달려들어 5명의 전담팀을 꾸리고 심지어 압수수색까지 검토하고 있다. 검사가 직접 시사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고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PD수첩〉은 1987년 6월 항쟁과 뒤이은 1990년 4월 KBS 노동자들의 방송 민주화 투쟁에 영향받아 1990년 5월에 시작한 시사 프로그램이다. 이 때문에 방송 노동자들은 〈PD수첩〉에 대한 공격을 언론노동자들이 쌓아 올린 방송 민주화에 대한 도전으로 여긴다.

〈PD수첩〉의 오동운 PD는 “쓰러지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쓰러지는 소를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는 것”이 〈PD수



〈PD수첩〉을 지키기 위해 모인 촛불 소녀들

첩〉의 주장이었다고 말한다. “아래사 빈슨의 병명도 의도적으로 조작된 게 아니라 인터뷰 당사자의 말실수를 의미 전달을 위해 제대로 바로 잡은 것이다. 조중동은 “의도적 오역” 운운하지만 동물성 사료 금지 완화 조치를 담은 미국 연방 관보의 내

용을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로 황당하게 오역한 것은 바로 농림수산부 아닌가.

7월 7일 15년 만에 긴급 총회를 개최한 MBC PD들은 검찰의 표적 수사를 규탄하고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강철구

감사원·국세청·검찰을 동원한 KBS 장악 음모, MBC와 KBS 2TV 민영화 계획, YTN 등 언론사 사장에게 MB맨 임명, 〈PD수첩〉과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에 대한 검찰 수사 등에 맞선 대중적 반감이 존재하는 이때 방송 노동자들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한다면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투쟁을 준비하는 방송 노동자들

7월 4일 KBS 앞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분쇄 투쟁에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1천5백여 명이 모였다. 7월 8일에는 전국에서 6백여 명의 MBC 노동자들이 집결해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PD수첩〉 표적수

사 정치검찰 규탄대회’를 열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MBC 전국 조합원 긴급 총회’를 개최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달에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신자유주의·전쟁 동맹을 위한

부시 방한을 반대하라

8월 5일 방한하는 부시는 〈워싱턴포스트〉가 “부시의 푸들”이라 부른 이명박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와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거대 다국적기업과 부유층의 이익을 위해 한미FTA 등 신자유주의 동맹을 밀어붙이고 있는 부시와 이명박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와 MD(미사일방어) 체제로 동아시아에서 위기를 높이는 전쟁 동맹 강화에도 혈안이 돼 있다.

한미 전쟁 동맹의 핵심에는 중동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된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지원하는 문제도 있다.

특히 부시는 8년째 미국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장에 한국군을 파병해 주길 바란다.

최근 미군과 나토 연합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항 세력에 계속 밀리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사망자 수는 지난 5월 처음으로 이라

크 주둔군 전사자 수를 앞질렀다. 아프가니스탄 전황이 이대로 간다면 중동에서 미 제국주의의 영향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부시는 7월 초 미군 추가 파병을 결정했고 각국에도 추가 파병 SOS를 쳤다. 그 결과 일본은 육상자위대 파병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독일과 영국도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대열에 가세했다.

부시는 8월 한국 방문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확약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챙기고 싶어 안달이다.

이명박은 부시의 요구를 거스르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이명박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군이 철수한 뒤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국내 경찰 파견을 결정한 바 있다. 부시와 이명박에게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태가 낳았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부시가 침 흘리는 파병 관련 선물

보따리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레바논 파병 연장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레바논 파병 연장 동의를 통과시켜 2007년 7월부터 파병된 동명부대원 3백59명의 파병 기간을 다시 1년 연장하려 한다.

동명부대가 속한 레바논 UN평화유지군은 2006년 부시가 후원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 전쟁이 실패한 후, 친미 정당들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이익을 돕기 위한 군대를 더 주둔시키는 게 부시와 이명박의 바람이다.

부시와 이명박의 신자유주의·전쟁 동맹을 저지하기 위해 촛불 운동은 부시 방한 반대로 번져야 한다. 부시의 방한에 맞췄을 열릴 부시 방한 반대 집회에 모두 참가하자.

김어진

저·항·운·동·의·축·제

맞시즘2008

맞시즘 2008은 40여 개의 토론과 진보적 영화, 음악, 사진전 등이 어우러지는 저항운동의 축제이자 대안을 모색하는 장입니다.

맞시즘 2008에서는 촛불 운동의 주도적 참여자들, 국내외 반전·반신자유주의 활동가들, 진보적 지식인들이 연설할 것입니다.

맞시즘 2008에서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촛불 운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운동의 방향과 더 나은 사회의 대안을 함께 모색해 봅시다.

주요 연사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동민운동가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 상황실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우석균 의사/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정책자문위원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정책자문위원 김지윤 고려대 학생/토론회에서 한승수 총리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일명 ‘고대녀’ 강양구 〈프레시안〉과학·환경 담당 기자/황우석 사기극을 들춰낸 언론인 김수행 맑스주의 경제학자/사회과학아카데미 대표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이강택 〈KBS 스페셜〉PD/광우병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한 언론인 이영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부지부장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이슬람〉의 저자 정성진 경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계간 〈마르크스주의 연구〉편집위원장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홍미정 한국외국어대 연구교수

개회 연사

조너선 닐 아동문학가/대안세계화운동가

이언 버철 영국의 맑스주의 역사가

- ★ 2008년 촛불 운동과 새로운 저항 시대의 개막
- ★ 광우병 — 신자유주의가 낳은 공포 _박상표
- ★ 이명박 정부와 미친 교육 _이영주
- ★ 이명박 운하 — 무엇을 위한 삽질인가?
- ★ 영화 〈식코〉의 현실이 한국에 온다 — 의료를 민영화해서는 안 되는 까닭
- ★ 이명박, 공공서비스 민영화, 신자유주의
- ★ 한미FTA, 왜 반대해야 하는가? _강기갑
- ★ 신자유주의는 한국 사회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가? _우석균
- ★ 한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 —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가?
- ★ 인터넷 민주주의 — 신화와 실제
- ★ 민족 담론의 허와 실 _최일봉
- ★ 자발성과 지도 그리고 사회변혁 정치 단체
- ★ 세계 경제위기, 1930년대식 대공황이 재연되는가? _정성진
- ★ 자본주의는 왜 위기에 빠지나? —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 _김수행
- ★ 고유가의 정치경제학 _이강택
- ★ 대선 앞둔 미국 — 미국은 변화하는가? _조너선 닐
- ★ 이라크 전쟁, 이란으로 번지나
- ★ 이슬람 혐오, 그 거짓을 파헤친다 _이희수
- ★ 사회주의자는 무신론자여야만 하는가? _최일봉
- ★ 1968년 반란 참가자가 말하는 1968년 반란 _이언 버철
- ★ 지구 온난화를 멈춰라, 세계를 바꾸자 _조너선 닐
- ★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



일시_ 8월 14일(목) ~ 17일(일) | 장소_ 고려대학교

주최_ 다함께

참가문의_ 02-2271-2395, atgmail@nate.com, http://www.marxism.or.kr